

해외의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과 시사점

2017. 2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차 례>

요 약	i
제1장 연구 배경	1
제2장 미국의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	5
1. 미국의 하도급 규제 개요	5
2. 미국의 하도급 규제 현황	6
(1) 공공사업에서의 하도급 규제 사항	6
(2) 하도급대금 지불 규정(대금 지급 기간)과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기타 규제	13
(3) 하도급대금 지급 보호제도	16
(4) 징벌적 손해배상제 운용 : 3배 보상 및 하도급금액 사전 검토	19
(5) 표준하도급 계약 약관 활용과 법정 계약 양식 준수	20
(6)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시정 목적 시공계약자협의회 운영	22
3. 시사점	23
제3장 EU의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	27
1. EU의 하도급 규제 개요	27
2. EU의 하도급 규제 현황	31
(1) 공공 건설공사시 하도급 계약 자료 공개	31
(2) 공공 건설공사시 원사업자의 최소 분담비율 지정(직접시공 의무)	33
(3) 공공 건설공사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규정, 재하도급 허용	34
(4)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 및 대금지급 지체시 지연이자 규정	35
3. 시사점	36
제4장 독일의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	39
1. 독일의 하도급 규제 개요	39
2. 독일의 하도급 규제 현황	41
(1) 원사업자 직접시공 의무와 예외 규정	41

(2) 하도급 정보 제공 의무(수급사업인 통보 의무)	43
(3) 하도급대금 지급 및 하도급 관련 정보 서면 교부, 기타 하도급 규정	44
3. 시사점	45

제5장 영국의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 47

1. 영국의 하도급 규제 개요	47
2. 영국의 하도급 규제 현황	48
(1) 하도급 정보 제공 의무와 특정 수급사업자 배제 규정, 재하도급 허용	48
(2) 하도급 서면 계약 의무화	49
(3)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	50
(4)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규정	52
3. 시사점	53

제6장 프랑스의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 55

1. 프랑스의 하도급 규제 개요	55
2. 프랑스의 하도급 규제 현황	56
(1) 하도급 사전 승인(하도급 정보 제공 의무) 및 하도급 대금지급 조건 승인	56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직접지급 및 직접청구권)	59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중층 하도급 허용	62
3. 시사점	64

제7장 일본의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 65

1. 일본의 하도급 규제 개요	65
2. 일본의 하도급 규제 현황	71
(1) 공공공사 일괄 하도급 금지	71
(2) 하도급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및 표준하도급계약 약관 활용 권고	73
(3)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	74
(4) 시공체제대장 작성(하도급 정보 제공), 중층 하도급 허용	77
(5) 하도급 채권보전 지원사업	80
3. 시사점	81

제8장 국내 건설 하도급 규제에 대한 시사점	83
1. 외국의 건설 하도급 규제와 국내와의 비교	83
(1) 일괄 하도급 금지 및 직접시공 의무 규정	85
(2) 재하도급 금지 및 동종 업종간 하도급 금지 규정	87
(3)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88
(4)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준수	89
(5)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92
(6) 징벌적 손해배상	92
(7) 표준 하도급계약서 활용	93
2. 종합 시사점	94
 참고 문헌	97
 부록 1. 미국의 건설사업참여자 대금지급 규정(주별 「PPA법」)	101
 Abstract	110

〈표 차례〉

<표 I-1> 최근 5년 간 건설 하도급 규모 및 건설업종별 하도급 비율	2
<표 II-1> 연방정부 조달규정(FAR) 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관계 정의 규정	7
<표 II-2> 미국 주정부의 건설사업 참여자 대금 지급 관련 법령 사례	14
<표 II-3> 건설 하도급계약 관련 주요 단체의 표준계약 약관	21
<표 II-4> 연방정부 조달규정(FAR) 내 계약 해지/종료와 관련된 법정 양식 사례	21
<표 III-1>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내용 중 하도급 관련 간접 규정	28
<표 VII-1> 일본 「건설업법」상의 건설 하도급 관련 규정	66
<표 VII-2> 일본 건설 하도급대금 지불 기준 주요 내용	76
<표 VIII-1> 각 국가별 주요 하도급 규제 사항 종합 비교	84
<표 VIII-2> 각 국가별 원사업자의 직접시공 의무 현황	86
<표 VIII-3> 각 국가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현황	91

〈그림 차례〉

<그림 II-1> 미국 건설산업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하는 3가지 제도	17
<그림 II-2> 「밀리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보호 범위	18
<그림 VIII-1> 일본 건설 하도급 불공정 행위 예방 가이드 사례	96

요 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건설산업은 주문생산에 의한 수주 산업으로서 다기화(多岐化)된 전문 영역을 고려시 수직적인 원·하도급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다양한 하도급 관련 규제를 운영 중임.
- 하지만 건설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하도급 규제의 종류가 갈수록 증가함과 동시에 법 위반 시 제재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건설 하도급 규제 강화에 따라 오히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보완을 통한 균형 발전이라는 기본원칙은 무너지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갈등만이 심화되고 있음.
- 건설산업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적인 건설 하도급 규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외국 제도의 벤치마킹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의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건설 하도급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후속 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제2장 미국의 주요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

-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하도급 거래에 적용되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고 있지 않음.
 - 이는 미국의 하도급 계약 관계가 우리나라와 달리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출발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다만,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개별 법령과 각 발주기관의 자체 규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하도급 관련 규제를 시행 중임.

1. 공공사업 하도급 규제 사항

- 미국의 경우 공공 발주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규제는 「연방법전(41 U.S.C.)」, 「중소기업법」, 「연방정부 조달규정(FAR)」, 「연방조달간소화법」 등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 이 외에도 하도급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연방 및 주별 「PPA법」에서, 그리고 대금 지급보증과 관련해서는 「필러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사업에서의 건설 하도급과 관련된 핵심 규정은 ① 하도급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하도급 시행 계획 사전 공표, ② 우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하도급 계약자 이행능력 심사, ③ 중층 하도급 허용, ④ 적정 하도급 비용·가격 책정 유도, ⑤ 원사업자 직접시공 의무 등임.

2. 하도급대금 지불 규정

- 현재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각 주(州) 또한 「PPA법」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지급뿐만이 아닌 발주자와 원사업자 등 공사 수행과 관련된 대금 지급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PPA법」은 공공사업에서의 대금 지급과 관련되어 제정된 법률이나, 현재 약 2/3에 해당하는 주에서까지 「PPA법」을 확대 적용하고 있음.
- 「PPA법」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관련 대금을 지급받은 후 평균 16일 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의 「건설산

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 기일과 유사함.

3. 하도급대금 지급 보호제도

- 미국의 경우 원사업자의 불합리한 하도급대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청구권(Mechanics' Lien, 선취특권)을 통해 원사업자(채무자)가 수급사업자(채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사 물건을 압류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공공사인 경우에는 민간공사와는 달리 공사대금청구권을 통하여 공사 물건의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밀러법」을 통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payment bond)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
- 이 외에도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 「건설산업지급보호법」을 통해 원사업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중지를 통지(Stop Notice)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기타 하도급 관련 규정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수급사업자=중소기업'이라는 인식 아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하도급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육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공공사업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운영 중임.
- 또한 일부 규제 사항 위반의 경우에도 사후 법적인 처벌보다는 보증제도를 통해 실제 사업 참여자의 권익을 보증하거나, 다양한 인센티브 제시를 통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하도급 정책 운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이 우리와의 차이점임.

제3장 EU의 주요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

- EU(유럽연합)의 경우, 창설 배경 및 여러 국가 간 연합으로 이루어진 특수성 등으로 인해 각 개별 회원국의 법령 제정을 위한 상위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건설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에서 공공 발주 건설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운영 중임.

1. 공공 건설공사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재하도급 허용

- EU의 경우 원사업자에 의한 불공정 행위(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거부·감액 등) 방지를 위해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규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해 2차 이하 수급사업자(재하도급자)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하도급대금 지불 규정

- EU의 경우 원·하도급 관계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는 달리 별도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 상거래시 대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인 「대금지급 지연규정(Directive 2011/7/EU)」을 적용함.
- 동 규정에서는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기간은 별도 계약서를 통해 규정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60일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이를 초과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제4장 독일의 주요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

- 독일의 경우 타 국가와는 달리 건설공사 수행시 분리·분할 발주에 따른 원사업자의 직접시공이 일반적이기에 하도급공사가 흔하지 않음.
- 이에 따라 「민법」 및 타 법률에서는 하도급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며, EU의 「공공조달지침」 및 「경쟁제한방지법」에 따른 「건설공사 도급규칙(VOB)」에서만 하도급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
 - 독일법상 건설 하도급 근거 규정은 VOB 내 「건설도급에 관한 일반규정(VOB/A)」과 「건설공사 시공을 위한 일반계약조건(VOB/B)」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하도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VOB/B임.
- 다만, 독일의 VOB는 그 규칙의 적용 범위가 공공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관련한 건설 하도급 규제 또한 공공공사만을 대상으로 함.
 - 민간의 경우 하도급 계약을 사적 계약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우리와의 차이임.

1. 원사업자 직접시공 의무

- 독일 건설공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사업자의 직접시공이 원칙임.
 - VOB/B 또한 원사업자의 직접시공 의무에 대해 “도급자는 자신의 기업이 스스로 조업하여 공사를 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VOB/B에서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업무 범위상 핵심 공종이 아닌 부대 공종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하도급대금 지불 규정

- 독일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과 관련하여 VOB/B에서는 하도급 계약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맺은 계약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계약으로 판단하고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대금 지급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이 완료되어 공사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즉시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준공 이전 상호 합의를 통해 기성금 및 준공금 등 하도급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청구일 기준 18~24일(영업일 기준) 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VOB/B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연할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 또한 드문 것으로 조사됨.

제5장 영국의 주요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

- 영국의 건설 하도급 거래를 규정한 법률은 공공공사 규율을 위한 「공공조달 관련 통합지침」과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를 아우르는 법률인 「신건설업법」임. 또한, 「신건설업법」의 하위 규정이라 할 수 있는 「건설계약규정지침」을 통해서도 하도급 거래 관계를 규제하고 있음.

1. 공공 건설공사시 하도급 정보 제공 의무, 특정 수급사업자 배제 규정

- 영국의 경우 공공조달 관련 통합 지침을 통해 수급사업자 및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정보 제공의 방법은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공사의 수행 예정자(수급사업자)를 입찰 서류에 명시하도록 하거나, 도급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까지 원사업자에게 관련 하도급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수급사업자에 관련한 정보를 단순히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특정 수급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발주자에게 부여하고 있음.

2. 하도급대금 지불 규정

- 영국 또한 원사업자의 불합리한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과 관련하여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 중임.
- 공공공사의 경우 공공 조달 관련 통합 지침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청구일 기준 30일 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민간공사는 「건설계약규정지침」을 통해 기성금의 경우 사전 정한 대금 지급 기일 이후 7일 이내(또는 만기일 중 늦게 도래하는 날), 준공금의 경우 준공 후 30일 이내(또는 만기일 중 늦게 도래한 날)로 대금 지급 기일을 규정함.

3.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영국 또한 공공사업에서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나 그 적용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조사됨.

- 이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대상 공사가 발주자가 사전 수급사업자를 별도 지명하는 지명하도급 방식(nominated subcontractor)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전체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직불제도와는 상이함.

제6장 프랑스의 주요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

- 프랑스의 경우 타 EU 회원국과는 달리 하도급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의 「하도급법」과 유사한 「하도급에 관한 법률(LST)」을 통해 규제하고 있음.
-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에만 한정된 법률임. 즉, 우리나라의 「하도급법」이 전체 산업의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데 반해 건설업에 국한된 법률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프랑스의 LST는 하도급 거래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닌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제하고 있음. 최소한의 규제으로써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대부분의 건설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 법률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상당 부분 사인(私人)간의 계약으로 존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1.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프랑스의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직불제도를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하여 달리 운영중임.
- 공공공사의 경우, LST 및 「공공계약에 관한 법령」을 통하여 단일공사 기준 하

도급 공사금액이 600유로(세금 포함) 이상인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Direct Payment)을 의무화하고 있음.

- 반면, 민간공사의 경우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수급사업자가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경과하도록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 청구권(Direct Action) 제도를 운영 중임.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 프랑스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규정 외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및 원사업자의 파산 절차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권리를 유지시키는 제도를 운영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 중임.
- LST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을 하려면 반드시 금융기관이 날인하여 발행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증서 교부가 없는 것 자체로 계약을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증서 형식이나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도 무효로 인정하고 있는 등 강력한 의무 규정을 운영 중임.
- 더구나 이러한 계약 무효 조항은 수급사업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상대적 무효이기에 수급사업자의 대금 지급과 관련한 권리를 강력히 보호하고 있음.

제7장 일본의 주요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하도급법」과 유사한 「하청법」을 통하여 일반적 산업에서의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하청법」이 아닌 「건설업법」을 적용하고 있음.

- 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해 「하청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와 유사한 규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규제를 부과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일본은 건설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 「건설업법」과 더불어 공공공사인 경우, 「지불지연방지법」 및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제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일본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사후적인 분쟁 해결 및 강력한 처벌을 통한 공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일본은 하도급 규제 강화보다는 원사업자에 의한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됨.

1. 공공공사 일괄 하도급 금지

-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 일괄 하도급을 「건설업법」,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다만,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사전에 승인받게 되면 제한적으로 일괄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음.
- 일괄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 또한 영업정지가 이루어지는 등 강력한 감독 처분 규정을 운영 중임.

2. 하도급대금 지불 규정

- 일본 「건설업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단, 원사업자가 특정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인도 신청일 기준 5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이 외에도 「건설업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지불시의 현금 및 선급금 지급 권고, 검사 및 인도 시기 규정, 어음 지불 방법 등 다양한 하도급대금 지불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3. 시공체제대장 작성(하도급 정보 제공)

- 일본의 시공체제대장은 공사 시공을 맡은 모든 건설사(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재수급사업자)의 업무 범위, 참여 기술자 등을 기재한 기록을 의미함.
 - 시공체제대장은 현장 시공 체계를 파악함으로써 ① 품질·공정·안전 등 시공상의 트러블 발생, ② 불량 부적격 업체의 시공 참가, 「건설업법」 위반, 안이한 중층 하도급에 따른 생산 효율의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시공체제대장은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 작성하여 준공 때까지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공공공사의 경우 사본 또한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공체제대장의 작성 범위는 건설공사 도급 계약 내의 모든 수급사업자(무허가 업체 포함)이므로, 1차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2~3차 수급사업자도 기재 대상에 포함됨.

제8장 국내 건설 하도급 규제에 대한 시사점

1. 외국의 건설 하도급 규제와 국내와의 비교

- 우리나라와 해외 선진국(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의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설 하도급에 대해 다양한 의무·금지 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중층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각 국가의 산업 특성에 적합한 최소한의 시장질서 유지 측면의 규제만을 운영 중임(<표 VIII-1> 참조).
- 이 중 우리나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 하도급 규제 사항과 선진국의 하도급 규제 사항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1) 일괄 하도급 금지 및 직접시공 의무 규정

-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 일괄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괄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음.
- 반면, 외국의 경우 공공공사만 일괄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일괄 하도급을 제한하지 않음.
 - 이는 원사업자의 자율성과 시공 효율성을 존중하고 사인간 계약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임.
 - 일괄 하도급 금지를 강력히 규정하고 있는 일본 또한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두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 공공 및 민간 공사의 경우에는 규정 위반시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감독 처분이 이루어져 원사업자만을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규제의 형평성 및 제도 운용의 실효성 또한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일괄 하도급 금지’ 규정은 원사업자의 자율성과 시공 효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규제인 만큼 사업의 특성 및 페이퍼 컴퍼니 양산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 규정의 신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직접시공 의무 규정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만 도급금액 기준 10~50%의 비율만큼 원사업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공사 규모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최소 의무비율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법 기준 도급금액의 12%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와는 차이를 보임.
- 따라서 직접시공 의무 규정의 경우 공사 규모로 일원화하여 제한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적용 범위와 직접시공 최소 비율에 대한 종합적 재논의가 필요함.

(2) 동종 업종간 하도급 금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동종 업종간 하도급 금지 규정은 재하도급 금지와 같이 외국에는 없는 우리만의 제도임.
 - 이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시장의 니즈가 아닌 제도로써 구분한 우리나라 특유의 업역 구분에 따라 생성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비해 조사 국가 모두 업종에 따른 원·하도급 자격에 대한 법·제도적 제한이 없거나 우리처럼 경직되어 있지 않음. 그 이유는 원사업자의 자율성 및 시공 효율성에 기인한 최적의 건설 생산체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종 업종간 하도급 금지 규정은 건설 업역 체계 개선 및 「건설통합법」 제정 등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 공공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만의 제도로써 미국,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체결한 사인간의 계약을 과다하게 침해할 수 있기에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음.
 - 미국의 경우 「FAR」 규정을 통해 발주기관의 계약 담당 공무원이 가격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상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격 책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와 같은 일률적인 심사제도라고는 볼 수 없음.
 - 일본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견적액을 크게 밑도는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심사 대상 공사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발주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음.
- 외국 사례를 종합하였을 때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기준의 획일적 적용에서 벗어나 일정 공사 규모 이하의 사업만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의 제기시 선택적으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시행하는 등 탄력적 제도 적용이 필요함.

(4)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준수

- 하도급 거래에 있어 대금 지급 관련 사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가장 분쟁의 여지가 높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해야 하는 핵심 사항이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조사 국가 모두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음.
 - 외국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은 우리나라에 비해 유사하거나 오히려 길게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대금 지급 규정 또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보다 구체

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서 서로 상이하게 대금 지급 기한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혼선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반면, 외국의 경우 단일 법률 또는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이 각 법률간 동일한 기준으로 정해져 있음. 따라서 국내 또한 제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별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대금 지급 기한의 일원화가 필요함.

(5)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의무화

- 우리나라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하도급법」의 경우에는 현금 외 어음 지급이 가능하도록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무에서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조사 국가 모두 하도급 대금의 현금 지급 의무화 규정이 없음.

(6) 징벌적 손해배상

- 수급사업자 보호 목적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영미법 체계인 미국, 영국에 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인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 중임.
- 특히나 미국 및 영국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법 적용의 형평성을 훼손하여 과도하게 수급사업자만을 보호하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건설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소송의 증가는 건설사들의 업무 비용과 건설공사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기에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여건을 종합 고려시 우리나라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

(7) 표준 하도급계약서 활용

-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경우, 조사 결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정부 주도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활용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일본을 제외한 조사 국가의 경우 각 건설공사 참여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에 의해 공표된 표준 계약약관을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게 원용하여 활용하거나, 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표준 계약약관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이는 산업 및 사업의 특성과 현업의 니즈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해당 단체에서 지속적 보완을 통해 개발한 표준 계약약관이 가장 합리적이고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또한 정부기관 주도의 단일화된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 및 활용 권고에서 탈피하여, 국내외 관련 협·단체에서 제정한 표준 계약약관 및 이를 원용한 기업 자체의 표준 하도급계약 양식을 개발하는 것 또한 고려가 필요함.

2. 종합 시사점

- 이 외에도 해외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하도급 규제 사항을 종합·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외국의 건설 하도급 거래에 대한 규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 원칙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제한적 규제 위주로 관련 법령을 운용하고 있음.
 - 또한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체결된 계약 내용의 이행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원가 인상에 따른 단가의 추가 조정이 가능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정 변경의 원칙은 입법적으로 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외국 대비 과도한 건설 하도급 규제를 운영 중임.
 - 하도급 규제의 적용 범위 또한 우리나라는 「하도급법」에 의해 수급사업자보다 매출 규모가 큰 원사업자인 경우에만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하도급 거래 관계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등 하도급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함.

- 둘째, 외국의 건설 하도급 규제 법률은 우리나라 「하도급법」과 같은 별도 법률의 제정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산업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설 관련 법령이나 공공 건설 조달 관련 법률을 통해서만 규제하고 있음.
 - 이는 매번 다른 목적물을 위해 다른 사업 참여자들과 한시적 장소에서 일회성 생산이 이루어지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하도급 거래와 동일한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설 관련 법률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임.
 -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법률을 통해 하도급 거래를 중복 규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부 공공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부가적인 규제 외에는 건설 관련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함.

-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건설 하도급 규제가 사후 분쟁 해결 및 강력한 처벌을 통

한 공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비해, 외국의 경우에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의 분쟁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 중심의 규제와 지원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이 점이 우리와의 차이점임.

- 우리나라 또한 프랑스의 ‘하도급 거래 가이드’, 일본의 ‘건설업법 준수 가이드라인’ 및 ‘하도급 불공정 행위 예방 가이드’ 등과 같이 실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기반의 관련 지침 제정이 필요함.

- 건설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주문생산에 의한 수주 산업으로서 도급형태상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비중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음.¹⁾
 - 건설생산 과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시장을 통해 다양한 건설 서비스를 구매하여 발주자인 고객에게 최종 서비스(공사 목적물)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 따라서 건설 하도급 시장은 건설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으로 공급자는 수급사업자이고, 구매자는 원사업자로 판단 가능함.²⁾
 - 이러한 건설 생산체계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경우 <표 I-1>과 같이 하도급 계약 비중이 73%에 달하는 등 원사업자에게 높은 의존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³⁾
-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⁴⁾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⁵⁾ 다양한 하도급 관련 규제를 운영 중임.
 - 건설업의 하도급 규제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음. 이 중 ‘하도급 행위제한’ 및 ‘하도급계약 적

1) 국무총리실·국토해양부(2011),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 방안.

2) 이의섭(2014),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고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 하도급률은 통상 (전문건설업 하도급 계약실적/종합건설업 계약실적 × 100)으로 산정됨. 국가통계포털(KOSIS)의 전문건설업 통계조사 및 종합건설업 조사통계를 위와 같이 계산하면 전체 건설공사의 하도급률은 2014년 기준 37.3%로 나타남(공공공사의 하도급률은 41.3%). 그런데 산정된 하도급률이 일반적 상식 수준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계약실적을 신고할 때 하도급계약 사항이 과소 신고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건설공사 평균 하도급 비율을 일괄적으로 산정하기는 곤란하며, 본 연구에서는 전문건설업의 연간 전체 계약액 중 하도급공사 계약실적을 준용하여 하도급 계약 비중을 산정함.

4)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부르는 명칭이 상이하며, 실제 현업에서도 이를 혼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일관되게 적용함.

하도급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원사업자	도급인	수급인
수급사업자	수급인	하수급인

5)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정화’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서 각각 규제하고 있음.

<표 1-1> 최근 5년 간 건설 하도급 규모 및 건설업종별 하도급 비율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종합 건설업	전문 건설업	전기 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소방 시설업	합계
2010	기성액	101,946	79,328	18,910	11,386	2,959	214,530
	원도급	99,456	20,390	15,325	8,962	1,802	145,935
	하도급	2,490	58,938	3,585	2,424	1,158	68,595
	(비율)	2.4%	74.3%	19.0%	21.3%	39.1%	32.0%
2011	기성액	109,278	80,590	19,657	11,559	3,145	224,229
	원도급	106,295	20,952	15,225	8,733	1,878	153,083
	하도급	2,983	59,638	4,432	2,826	1,267	71,146
	(비율)	2.7%	74.0%	22.5%	24.4%	40.3%	31.7%
2012	기성액	118,459	79,160	19,155	12,618	3,111	232,503
	원도급	115,573	21,997	14,220	9,321	1,812	162,923
	하도급	2,885	57,163	4,935	3,298	1,299	69,580
	(비율)	2.4%	72.2%	25.8%	26.1%	41.7%	29.9%
2013	기성액	121,964	83,486	20,299	12,959	3,568	242,275
	원도급	118,996	23,132	15,222	9,875	2,122	169,347
	하도급	2,968	60,355	5,077	3,084	1,445	72,929
	(비율)	2.4%	72.3%	25.0%	23.8%	40.5%	30.1%
2014	기성액	126,185	83,241	21,858	13,612	4,116	249,011
	원도급	123,036	22,940	16,098	10,053	2,374	174,500
	하도급	3,149	60,301	5,760	3,559	1,741	74,510
	(비율)	2.5%	72.4%	26.4%	26.1%	42.3%	29.9%
합계	기성액	577,832	405,805	99,879	62,134	16,899	1,162,548
	원도급	563,356	109,411	76,090	46,944	9,988	805,788
	하도급	14,475	296,395	23,789	15,191	6,910	356,760
	(비율)	2.5%	73.0%	23.8%	24.4%	40.9%	30.7%

주 : 1)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법적 분리발주가 보장되어 있기에 전문건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도급 비율이 높으나, 종합건설업과 같이 높지 않은 이유는 일정 규모 이하 사업 및 민간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자에게 통합발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2) 하도급은 하도급을 받은 기성액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건설업 통계,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이 외에도 해당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임 행정규칙⁶⁾을 통해서도 하도급 관련 규제를 운영 중임.
 -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하도급 규제 사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⁷⁾
- 하지만 이러한 중층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건설 하도급 거래관계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하도급 규제의 종류가 갈수록 증가함과 동시에 법 위반 시 제재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조사 결과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건설 하도급과 관련된 제도·정책은 총 115개가 신설되거나 강화됨.
 - 이 중 원사업자를 보호하거나 원사업자의 부당한 권리를 인정한 경우는 단 1건이며, 행정업무 효율 확대를 위한 행정처리 간소화 5건을 포함할 경우 나머지 109건 모두가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제 내용의 신설·강화 사항임.
- 이러한 건설 하도급 규제 강화에 따라 오히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보완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기본원칙은 무너지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업역 갈등만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⁸⁾
- 전문건설업 대표 단체인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경우 오랜 관행과 원사업자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 하도급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⁹⁾, 이에 따른 규제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임.
 - 반면, 종합건설업 대표 단체인 대한건설협회의 경우 불합리한 하도급 규제 강화는 건설시장 왜곡 및 기업의 경영활동 부담을 초래하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현

6) 대표적 행정규칙으로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들 수 있음.

7)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 하도급계약을 규제하는 것은 민간간의 사적 계약 영역이므로 이에 대해 직접 규정할 이유는 없으나, 불공정 행위로부터의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와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통한 2차 이하 하부 생산 단계의 연쇄적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법률 및 관련 행정규칙에서 하도급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8) 건설경제, “하도급 정책 여전히 ‘일방통행’… 사업자간 갈등만 부추겨”, 2016.7.28.

9) 국토일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여전”, 2010.12.8.

행 제도 또한 정상적 업체까지 포함하는 획일적 규제 및 과중한 제재란 입장임.¹⁰⁾

- 따라서 건설산업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하여 합리적인 건설 하도급 규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외국 제도의 벤치마킹(benchmarking)이 필요함.
 - 하도급과 관련된 선진국의 법·제도는 각 국가의 하도급 거래 성격 및 산업 구조의 특성에 따라 관련 규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건설 하도급 규제의 경우 각 국가의 하도급 거래 성격 및 해당 규제가 태동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부족한 채 단위 제도만을 답습하여 적용하고 있어, 규제의 종류가 외국에 비해 다양함.
 - 또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 하도급 거래 연구는 그간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하도급과 관련된 해외 제도 분석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해외 국가들 또한 건설산업의 변화 및 각 국가의 경제·환경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최근 변경 사항을 반영한 연구가 부재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의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건설 하도급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후속 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10) 대한건설협회, 건설업계 현안 및 애로 건의(공정거래위원장·업계 대표 간담회), 2016.11.4.

1. 미국의 하도급 규제 개요

- 미국은 우리나라 및 일본과 같이 하도급거래에 적용되는 별도의 특별법(예 : 우리나라의 경우 「하도급법」)을 제정하여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고 있지 않음.
 - 이는 미국의 하도급 계약 관계가 우리나라와 달리 대등한 지위에서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¹¹⁾
 - 따라서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관계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체불 방지 등 대금 지급과 관련된 최소한의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정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를 자유에 의한 계약을 통해 하도급 거래관계를 맺도록 유도하고 있음.
- 다만, 공공사업에 국한하여 사회정책상 중소기업 및 소수민족, 여성 등을 배려하는 일부 혜택을 제공¹²⁾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원·하도급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보다는 보증제도를 통해 실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 공공사업의 기타 하도급 규정 또한 규정 위반에 따른 사후 처벌보다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시를 통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 운영 중임.
- 다음은 미국의 건설 하도급 관련 규제에 대한 주요 현황임.

11) 강유추(2014),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2) 특히,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서는 연방계약 준수 프로그램 사무소(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 특별 감독관(compliance officer)으로 하여금 연방정부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의 공정거래 규정 준수 여부(주로 중소기업 및 소수민족, 여성 차별 금지 및 기타 노동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평가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계약 준수 매뉴얼(Federal Contract Compliance Manual)을 발간하여 공정거래 규정 준수를 위한 각종 발주기관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 미국의 하도급 규제 현황

(1) 공공사업에서의 하도급 규제 사항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독자적인 하도급법을 통해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개별 법령과 각 기관의 자체 규칙을 통해 일부 필요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대금지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도급 관련 규정의 경우 공공사업에서만 적용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민간 계약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사적 자치의 원칙(principle of private autonomy)¹³⁾을 철저히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미국의 경우 다양한 법률을 통하여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고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공공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규제로는 「미국 연방법전(Title 41 of the United State Code)¹⁴⁾」, 「연방정부 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이하 FAR)」, 「연방조달간소화법(Federal Acquisition Streaming Act)」,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등이 있음.
- 이 외에도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해서는 「Prompt Payment Act(이하 PPA)」에서, 대금 지급보증과 관련해서는 「밀리법(Miller Act)」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연방정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된 핵심 법률인 FAR를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를 정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3)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사법자치의 원칙, 개인의사자치의 원칙, 의사자치의 원칙으로도 불리는 사적자치(私的自治) 원칙은 사법(私法)상의 법률 관계, 특히 거래의 경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 자기 책임 하에 규율되는 것이 이상적이며 사적 생활의 영역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는 근대사법의 원칙을 의미함. 이병태(2011),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14) 미국 연방법전(U.S Code)은 미국 내 일반 법령(general statutes) 및 영구 법령(permanent statutes)을 주제에 따라 공식 코드화한 것으로 총 50개 주제(Title)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조달 및 계약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Title 41-Public Contracts에서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표 II-1> 연방정부 조달규정(FAR) 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관계 정의 규정

규정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관계 정의 규정 내용
Part 3 Improper Business Practices and Personal Conflicts of Inter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한 상거래(business practices)와 개인 간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가이드
Part 9 Contractor Qualific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당사자(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책임 및 자격 조건
Part 16 Types of Contr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계약의 방법별 발주자와 계약자 사이의 공사수행에 따른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 권한, 위험 감수, 이윤의 보장 및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
Part 19 Small Business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계약과 소규모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계약에 관한 사항
Part 30 Cost Accounting Standards Administ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계약 적용에 관한 방침 및 절차
Part 31 Contract Cost Principles and Proced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및 하도급 계약 금액의 책정과 변경에 관련한 방침 및 절차
Part 43 Contract Modif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설계와 다른 현장조건, 발주자에 의한 공기지연 등 계약사항의 변경과 관련한 발주자의 행정업무에 대한 사항
Part 44 Subcontracting Policies and Proced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에 의한 하도급 계약 절차

- 하지만 FAR에서는 상기의 규정을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를 일부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의 건설 계약과 관련하여 계층화된 여러 공사 참여자들 간의 계약상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사항은 자세히 정의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공공공사 발주 및 계약 시 발주자 입장에서 준수되어야 할 법률적 의무와 행정 절차 및 방침 등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규정되어 있음.¹⁵⁾
- 이 중 공공사업에서의 건설 하도급과 관련한 핵심 규정 사항으로는 ① 하도급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하도급 시행 계획 사전 공표, ② 우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하도급 계약자 이행능력 심사, ③ 중층 하도급 허용, ④ 적정 하도급 비용·가격 책정 유도, ⑤ 원사업자 직접시공 의무(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들 수 있음.

15) Innis, D. F., and A. P. Silberman(2010), Provision and Issues Unique to Government Contracts, Federal government construction contracts, American Bar Association.

- 1)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하도급계획 목표 사전 공표
 -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 확대 및 기회 균등 부여를 위해 미국 연방법에서는 2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면 그 계획을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41 U.S.C §1708(a)(3)).
 - 이에 따라 FAR에서는 입찰이나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체결 공고 시 정부조달 계약 및 이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범정부공고처(Government-Wide Point Entry, GPE)에 공고할 것을 의무화함(FAR 5.002, 5.201, 5.206).
 - 특히 15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을 낙찰 받은 원사업자나, 그 계약에서 1.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참여 기회 확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도급 발주 계획을 사전 공표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음.¹⁶⁾

연방정부 조달규정(FAR) Part 5. 계약행위의 공고(Publicizing Contract Actions)

FAR 5.002 정책

계약담당공무원은 이하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약행위를 공고하여야 한다.

- (a) 경쟁의 촉진
- (b)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계의 참여 확대
- (c) 중소기업, 중소 규모의 퇴역군인 기업, 중소 규모 상이용사 기업, 역사적 저개발사업 지역 내의 중소 규모의 기업, 중소 규모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약자 기업, 그리고 중소 규모의 여성 기업들이 원도급 및 하도급의 기회를 얻는 것을 지원하는 것

FAR 5.201 일반

- (a)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과 연방조달정책실법(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아래의 경우에 예정된 계약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1) 25,0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정 계약 행위는 요약하여 범정부공고처(GPE : Government-wide Point of Entry)에 공고한다.

(중 략)

- (c) 공고를 하는 주요 목적은 중소 규모 기업들이 조달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원도급 및 하도급 기회를 확인함으로써 경쟁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FAR 5.206 하도급계약 체결 계획의 공고

- (a) 다음의 원사업자들은 하도급계약에 대한 경쟁을 추구하고, 자격이 있는 역사적 저개발지역 내의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 규모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약자 기업, 중소 규모의 여성 기업, 중소 규모의 퇴역군인 기업, 중소 규모의 상이용사 기업들의 하도급계약 참여를 증진하

16) 최인호(2011),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정부조달계약의 공공성과 하도급질서의 공정화를 위한 법적 규율, 법학 논총 제31집 제3호, 일부 인용.

고, 정해진 하도급계약 계획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GPE에 공고를 게시할 수 있다.

(1) 15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을 낙찰 받은 원사업자로서, 하도급 계약 체결의 가능성이 있는 자

(2) 15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에 따른 각각의 단계에서 15,000달러를 초과하는 하도급 계약의 기회를 가지는 하도급 계약자 또는 원사업자

(b)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업 기회

(2) 사전 자격심사 요건

(3) 요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장소

- 또한 FAR에서는 정부조달 계약을 통한 하도급계약의 기회를 중·소규모의 사회적·경제적 약자(small disadvantaged business)에게 부여하기 위한 정책 또한 운영 중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연방 조달기관의 조달계획 작성 시 하도급계약의 경쟁 촉진과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하도급계약의 기회가 최대한 주어지도록 관련 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FAR 7.105, 7.107)하고 있음.

연방정부 조달규정(FAR) Part 7. 조달계획의 확정(Acquisition Planning)

FAR 7.105 서면조달계획의 내용

(a) 실천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중 략)

(2) 경쟁

(IV)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하도급 경쟁이 가능하기 위해 하도급이 어떻게 추구하고, 촉진되고, 지속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또한 하도급 경쟁을 증진함에 있어서 알려진 모든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검토·제시해야 한다.

FAR 7.107 Bundling 관련 조달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요건

(중 략)

(e) 상당한(substantial) bundling이란 국방부 조달의 경우 800만 달러 이상, NASA·총무처·에너지부의 경우 600만 달러 이상, 기타 기관의 경우 250만 달러 이상의 계약 또는 주문과 관련된 bundling을 의미한다.

제안된 조달전략이 이러한 bundling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달전략은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중 략)

(4) 낙찰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약 또는 주문의 각각의 단계에서 중소기업들에게 하도급계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최대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 이 외에도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에서는 100만 달러 이상의 공공 계약을 체결하려는 대기업에 대해 하도급 기회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도록 요청하고 있음.
 - 이러한 하도급 계획에는 하도급을 시행할 전체 사업금액 및 중소기업에게 하도급할 비율, 어떤 공사 및 용역에 대해 하도급을 시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만약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에 시행할 하도급 계획 내용을 공고하지 않거나, 본 입찰 이전에 중소기업과 하도급 계약 체결 협상을 실패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박탈하는 등 중소기업의 하도급 기회 참여를 의무화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를 운영 중임.
- 하지만 대형 공공공사에서의 중소기업의 하도급계약 기회 확대를 위해 상기와 같은 규제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원사업자에 대해 성공 보수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평가 시 가산점을 주는 등 중소기업의 하도급 참여 기회 확대를 장려하는 제도 또한 운영 중임.

2) 우수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수급사업자 계약이행 능력 심사

- 미 연방정부 발주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우수 품질 확보 및 발주기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FAR 규정(FAR 9.130, 9.104-3, 9.104-4)을 통해 원사업자의 계약이행 능력 심사(적격심사) 시 수급사업자의 이행능력도 함께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 중임.
- 경우에 따라 원사업자(예정)가 수급사업자(예정)의 이행 능력을 증명하는 것 외에 계약 담당 공무원이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까지 직접 심사를 통하여 사업 참여 여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능력 심사를 강화하여 운영 중임.

연방정부 조달규정(FAR) Part 9. 적격심사(Contractor Qualifications)

FAR 9.103 정책

- (a) 조달은 이행능력이 있는 잠재적 계약자(responsible prospective contractors)로부터만 이루어지고, 이러한 계약자에게 낙찰되어야 한다.
- (b)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이행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구매나 낙찰도 이루어질 수 없다. 잠재적 계약자가 이행능력이 있음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능력이 없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잠재적 계약자가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능력 증명 및 이행능력 결정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c) 최저가만을 기준으로 낙찰이 이루어진 사업이 사후에 불이행, 납품 지연 또는 기타 만족스럽지 못한 이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계약비용 또는 행정비용을 초래한다면 이는 잘못된 비용 절감일 수 있다. 최저가로 정부 조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도급자(원사업자)가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급자에게 계약이 낙찰될 필요는 없다. 잠재적 계약자는 그 자신의 계약이행능력(필요하다면 수급사업자의 이행능력 포함)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

FAR 9.104-3 적격심사 기준의 적용

- (b) 만족스러운 이행실적,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현재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최근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잠재적 계약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상황이 계약자의 통제범위 밖이었다거나 계약자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였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계약의 이행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수용 가능하도록 이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끈기와 인내를 기울이지 못한 것은 이행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계약의 품질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만족스러운 이행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관련된 계약의 수, 그리고 각각의 계약 이행에 있어서의 불충분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계약이 중소기업 하도급계약 프로그램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잠재적 계약자의 최근 계약에서의 하도급계약 계획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중 략)

- (d) (1) 중소기업 관련하여 계약의 이행능력이 없음을 결정하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청에 해당 사안을 이첩해야 하며, 중소기업청이 계약의 이행능력 증명서 발급 여부를 판단한다.
- (2) 하도급계약에 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이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FAR 9.104-4 하도급계약자의 이행능력

- (a) 일반적으로 잠재적인 원사업자(prime contractor)가 그의 잠재적인 수급사업자(subcontractor)들의 이행능력을 결정하는 데 책임이 있다. 잠재적인 수급사업자의 이행능력에 대한 결정사항은 잠재적인 원사업자의 이행능력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잠재적 원사업자는 잠재적 수급사업자의 이행능력에 대한 서면의 증거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 (b) 수급사업자의 이행능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정부에 이익이 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사업자의 이행능력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예를 들면, 원사업 계약이 의료품의 공급이나 긴급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상당한 규모의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정부는 수급사업자의 이행능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이행능력 판단에 사용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3) 중층 하도급 허용

- 미국의 연방법 및 FAR 규정의 경우, ‘중층 하도급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은 없음.
- 다만, 연방법에서 원도급자의 하도급 단계를 최소화하도록 규정(41 U.S.C §4701)하고 있고, 대금지불과 관련한 「PPA법」의 내용상에도 2차 수급사업자까지 명시되어 있는 점, 「밀러법」에 따른 지급이행보증의 범위가 2차 수급사업자까지 보호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였을 때 중층 하도급(2차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고 판단됨.¹⁷⁾

4) 적정 하도급 비용·가격 책정 유도

-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규정(FAR)에서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의 비용 또는 가격 책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운영 중임.
- 특히 FAR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별도로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이를 심사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부실 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제를 운영하고 있음.

연방정부 조달규정(FAR) Part 15.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Contracting by Negotiation)

FAR 15.404-3 하도급계약의 가격 책정 검토

- (a)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 계약비용을 포함해 원도급(Prime Contract) 가격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원도급 가격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승인된 구매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안한 가격을 비용분석하거나 가격 분석을 하였는지, 원사업자가 원도급 계약을 협상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가격을 협상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가 있었다고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와 수급사업자의 비용/가격 책정자료를 분석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b)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는 다음을 시행하여야 한다.
 - (1) 제안된 하도급계약 가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비용분석이나 가격분석을 시행한다.
 - (2) 가격제안서에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포함한다.
- (c) 비용/가격 책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하도급계약을 낙찰하기 전에, 구매/주문을 하기 전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계약변경을 하기 전에 비용/가격 책정 자료를 분석하여야 한다.
 - (1)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금액이 다음 두 금액 중 하나보다 낮을 경우 하도급계약의 비용/가격 책정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17) 실제 미국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중층 하도급을 활발히 활용 중임.

- (i) 1,250만 달러 이상의 금액
- (ii) 비용/가격 책정 자료의 기준금액 이상이고, 원사업자가 제안한 가격의 10%를 초과하는 금액, 계약담당공무원이 비용/가격 책정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계약담당공무원은 원도급의 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금액(위의 (c)(1)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하인 수급사업자의 비용/가격 책정 자료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라고(또는 제출하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5) 원사업자 직접시공 의무비율

- 미국은 또한 연방정부 발주 공공공사 수행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일정 비율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¹⁸⁾
- 구체적으로 FAR 규정에서는 일괄 하도급의 관행을 근절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원사업자에 의해 ‘직접 이행(시공)되어야 할 최소 비율(직접시공 의무비율)’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연방정부 조달규정(FAR) Part 36. 건설 도급계약 기타 설계시공계약

FAR 36.501 원사업자에 의한 채무의 이행

- (a)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모든 작업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관심과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원사업자는 자신의 인력으로써 계약상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직접 수행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원사업자가 직접 이행할 작업의 최소한도를 설정한 비율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율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과 작업 전반의 복잡성과 규모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의해 최대한 높게 설정될 수 있는데 법에 의하여 그 이상이 요구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적어도 1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배관, 난방, 전기 공사 등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하도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사업자에 의해 직접 수행되어야 할 공종과 수량을 설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2) 하도급대금 지불 규정(대금 지급 기간)과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기타 규제

- 미국 연방정부 발주 공공사업에서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에 대한 대금 지불 규정인 「Prompt Payment Act(이하 PPA법)」는 지난 1982년 「31 U.S.C §3901」 법률을 통해 제정되었음.

18) 직접시공 의무 규정으로 인해 원사업자의 일괄 하도급 또한 금지하고 있다고 판단 가능함.

- 「PPA법」의 초기 제정 목적은 연방정부가 체결한 계약에 대한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서임.
- 연방법 제정 이후 많은 주에서 주(州)법으로 공공 발주사업의 대금 지급과 관련된 「PPA법」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가 관련 법률을 운영하고 있음.

<표 II-2> 미국 주정부의 건설사업 참여자 대금 지급 관련 법령 사례

Arizona주

Arizona Prompt Pay Law(A.R.S §32-1129.02.B)

수급사업자 또는 자재공급자가 건설계약 규정에 의해 계약 내용을 이행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자재공급자에게, 그리고 각 수급사업자는 재수급사업자 또는 자재공급자에게 각 기성 및 준공 대금을 발주자나 원사업자로부터 받을 경우 7일 이내에 당해분에 대한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나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서도 7일 이내에 수급사업자나 자재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8일째부터는 지급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 매월 1.5%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Kansas주

The Fairness in Private Construction Act. Senate Bill No. 33

민간 건설사업의 발주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시의적절하게 하자 발생 없이 완성된 준공물에 대한 대금지급을 요청받을 경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원도급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31일째부터는 연 18%의 이자가 지급된다.

또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8일째 이후부터는 수급사업자에게 연 18%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Nevada주

Nevada. Chapter 62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지급 기일을 정한 경우 그 기일 또는 그 이전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10일 이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지급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대금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 빠른 기일에 지급해야 한다.

- 「PPA법」 제정 초기에는 연방법 및 주법 모두 공공사업에서의 대금 지급과 관련되어서만 적용되는 법률이었으나, 현재에는 약 2/3에 해당하는 주에서 민간사업에까지 「PPA법」을 확대 적용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민간 발주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자유 원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More freedom of contract than public Prompt Payment Acts) 수급사업자 보호 목적의 과도한 규제는 지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¹⁹⁾
- 또한, 일부 주 「PPA법」의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자재장비업자 등)간의 대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 외에도 다음과 같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음.²⁰⁾
 - ① 당사자(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PPA법」 적용 회피 금지(민간 발주 사업 포함)
 - ②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no damages for delay)
 - ③ 수급사업자에 대한 pay-if-paid 금지
 - ④ 선택적 준거법 및 관할 협의 조항(choice of law or venue clauses) 금지
 - ⑤ 대금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하도급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간 내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의 대금 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는 권리
- <부록 1>은 「PPA법」을 통한 미국 연방정부 및 50개 주의 건설사업 참여자(원사업자, 수급사업자(2차 수급사업자 포함)) 대금지급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관련 법률, 적용 범위, 대금지급 기일, 대금 지연 시 이자율)을 정리한 사항임.
- 대금지급 기일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하도급 대금

19) 김관보 외(2015), 선진국의 위수탁 계약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 김관보 외(2015), 전제서.

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0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주별로 상이하지만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주별 평균 16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하도급대금 지급보호제도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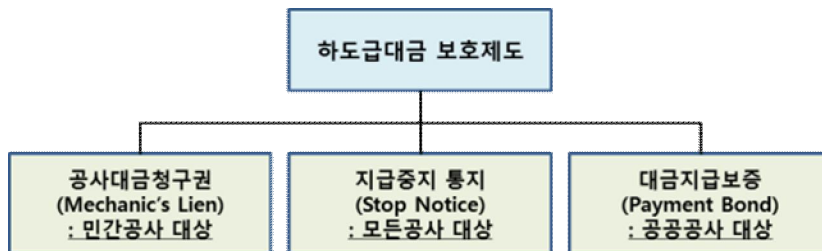
- 원사업자의 부당한 공사대금의 지급 유예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하도급대금 지급보호제’의 경우 미국은 크게 공공공사(연방정부 및 주정부 발주 공사)와 민간공사로 나누어 관련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청구권(Mechanics’ Lien, 선취특권)을 통해 건설공사 수행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채무자)가 이를 제공한 자(채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사 물건을 압류하여 미지급한 공사금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민간공사와 같은 공사대금청구권을 통해 공사 물건의 압류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밀리법(Miller Act)」을 통한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지급보증과 이행보증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하고 있음.
 - 「밀리법」의 대표적인 보호 규정으로는 10만 달러²²⁾ 이상의 연방정부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payment bond)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음.
 - 이를 통하여 원사업자와의 계약 관계에 의해 노동력과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수급사업자 및 2차 이하 수급사업자들을 원사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21) 김명수 외(2007), 건설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2) 공사금액이 2만 5,000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지급보증의 대안으로 「연방정부 조달규정(FAR)」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급 보호 수단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밀러법」에서는 원사업자의 채무 불이행 보호를 위해 연방정부에서 발주한 공공공사에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통해 참여하는 수급사업자 및 자재공급업자 등 모든 계약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 금액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해당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 및 자재공급업자가 공사 완공일 혹은 자재 납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적절한 대금을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 마지막 공사 완공일 혹은 자재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보증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 외에도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 모두를 아우르는 법률인 「건설산업지급보호법 (Public Law 106-49(Construction Industry Payment Protection Act))」 내 지급중지 통지(Stop Notice) 조항을 통해 원사업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수급사업자 및 자재공급업자의 피해를 보호하는 제도 또한 운영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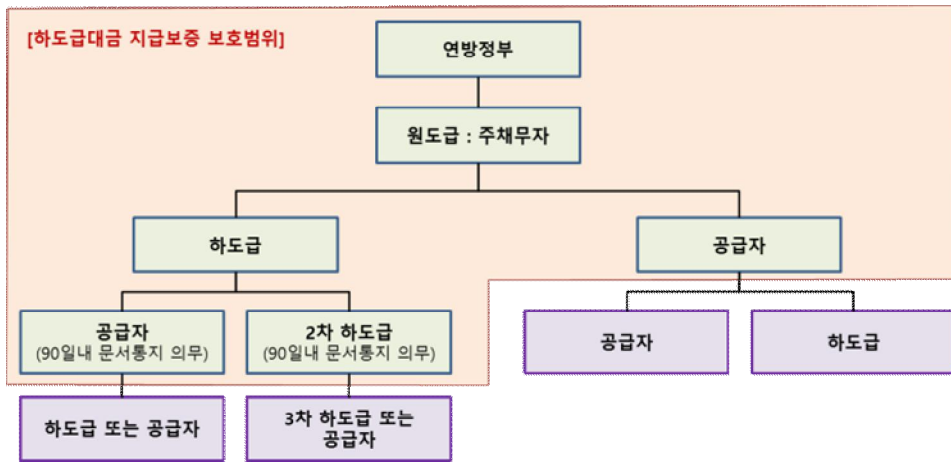
<그림 II-1> 미국 건설산업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하는 3가지 제도



자료 : 김명수 외(2007), 전제서.

- 하지만 「밀러법」에 의해 공공공사 시 적용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중층적 피라미드 생산 구조에서 3차 이하 수급사업자 또는 1차 자재공급자와 계약을 맺은 2차 이하 수급사업자 및 자재공급자는 원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증의 청구권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 즉, <그림 II-2>와 같이 원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수급사업자와 자재공급자(1차 청구권자)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 대상에 해당되나, 2차 청구자와 계약을 맺은 중층 수급사업자의 경우 보증의 청구권자가 되기에는 계약 관계가 멀기(too remote)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범위에서 제외됨.

<그림 11-2> 「밀러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보호 범위



주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보호 범위 내 기업들은 「밀러법」에 의해 보호되나, 영역 밖의 기업은 비보호.
자료 : 김명수 외(2007), 전게서, 일부 수정.

- 이와 같은 엄격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범위의 설정은 미국 건설산업이 2차 이하의 재하도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판례와 같이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범위 이견에 대한 ‘직접적 계약관계’ 규정 판례

United States ex rel Metal Manufacturing, inc.와 Federal Insurance Co., 소송 건에서 3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효력을 가지는가가 쟁점이 되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MaCarty Western constructors는 연방교도소 건설에서 원도급자이며, 이 회사는 1차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였고 이 업체는 다시 2차 수급사업자로, 2차 수급사업자는 다시 Metal Manufacturing으로부터 빔물 방지(flashing) 자재를 구입하였다.

공사 수행 중 자재대금을 지불받지 못하자 Metal社は 「밀러법」에 의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하도록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원도급자와 보증회사는 그 청구가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당시 공사 중에 2차 수급사업자가 Metal社에게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을 때, 1차 수급사업자가 2차 수급사업자와 Metal社에게 공동으로 수취할 수 있는 수표를 발행해주기로 합의한 적이 있었다. Metal社は 이 합의가 사실상 1차 하도급업체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 합의는 단지 Metal社가 자재 공급을 하도록 유인했던 수단일 뿐이며,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었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밀러법」의 법 해석에서 원도급자 또는 1차 수급사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어야 2차 이하의 수급사업자는 대금 지급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 김명수 외(2007), 전게서.

(4) 징벌적 손해배상제 운용 : 3배 보상 및 하도급금액 사전 검토²³⁾

- 미국의 경우 전 산업에 걸쳐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용 요건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의 각 주정부에서는 피해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의 성립을 위해 입증되어야 할 가해자에 의한 행위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① 가해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가해의 의식 여부
 - ② 가해자가 가해의 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의도적인 무관심이나 소극적 예방 조치 시행 여부
 - ③ 피해에 대한 가해자의 중과실 여부
- 하지만 최근 미국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도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송의 증가는 원사업자의 업무 비용과 건설공사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론 또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보상 및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고자 손해배상의 배상 한도액을 통상적 보상의 3배 배상(한도액 : 보상액 = 3:1)²⁴⁾²⁵⁾으로 제한하거나, 엄격한 배상 기준의 적용 및 하도급금액 사전제출허가제 운영 등과 같은 보완책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23) 김성일 외(2015),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주요 인용.

24) 미국의 3배 배상(threefold damage)제도는 경쟁 촉진과 독점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antitrust law) 중 하나인 「Clayton법」 상의 제도임. 미국의 「Clayton법」은 1914년 제정된 독점금지법으로서 끼워 팔기, 배타적 거래 행위, 반경쟁적인 주식 인수, 가격 차별 등의 금지 행위로 인하여 사업이나 재산에 침해를 입은 자는 자신이 입증한 손해액의 3배 및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Clayton Act 제4조). 이의섭(2009), 건설 하도급 거래 합리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선진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재인용.

25) 하지만 3배 배상제도를 1960년대부터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도입 초기 적극적 효용론에서 최근에는 3배 배상금액은 너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임.

(5) 표준 하도급계약 약관 활용과 법정 계약 양식 준수

- 미국 연방법 및 주법에서는 우리나라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 및 ‘공공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등과 같이 여러 공사 참여자들 간의 계약상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오히려 미국의 경우 공공공사 발주 및 계약 시 공사 참여자들 간의 계약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 입장에서 준수해야 할 법률적 의무와 행정 절차, 방침 등에 대한 법률 및 가이드 등을 제정하여 활용 중임.
- 특히, 하도급계약서의 경우 특정 법 및 규정을 통하여 활용을 강제화하지 않고 있으며, 철저한 사적 계약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에 의하여 민간 간 자율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연방정부 및 주정부 발주 공공사업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개별 계약서 활용은 원사업자가 스스로 표준 하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등을 제정해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따라서 건설 참여자들의 계약상 책임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의 경우에는 각 건설공사 참여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미국건축사협회, 미국건설협회 등)에 의해 공표된 표준계약 약관(standard form contract documents)을 개별 사업(공공 및 민간사업)의 특성에 맞게 원용하여 활용²⁶⁾하는 것이 일반적임(<표 II-3> 참조).
 - 최근에는 40개의 건설 유관단체²⁷⁾가 모여 갑 중심의 우월적 계약조건이 아닌 동등한 관계에서의 리스크 분배, 제3자 협의체의 운영을 통한 합의적 의사결정, 첨단 기술 적용 개념이 적극 도입된²⁸⁾ 표준계약 약관인 ‘Consensus Contract Documents, ConsensusDocs’의 활용 또한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음.

26) 관련 협·단체들에서 개발·제공하고 있는 표준계약 약관을 활용하여 각 건설기업들이 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한 표준계약서(표준계약 약관) 또한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27) 2016년 현재 미국발주자협회(COAA), 미국건설협회(AGC), 미국하도급자협회(ASA) 등 40개 건설유관단체가 멤버로 활동 중임.

28) 이종광 외(2012), 건설산업 상생협력 해외사례 분석,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및 ConsensusDocs(2016), 10 Reasons Your Projects Need ConsensusDocs. Kathleen O. B(2007), Recent Developments in Standard Form Construction Agreements, ASPE.

<표 II-3> 건설 하도급계약 관련 주요 단체의 표준계약 약관

1.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

- 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Contractor and Subcontractor(A401-2007)
- 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for use on a Sustainable Project(A401-2007)
- 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for a Design-Build Project(A441-2014)

2. 미국건설협회(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 AGC)

- Agreement Between Constructor and Subcontractor(AGC 750)
- Short Form Agreement Between Contractor and Subcontractor(AGC 751)
- Standard Subcontract Agreement for Use on Federal Government Construction Projects(AGC 752)
- Agreement Between Subcontractor and Subsubcontractor(AGC 725)

3. 미국하도급자협회(American Subcontractors Association, ASA)

- ASA Subcontract Addendum
- ASA Short-Form Subcontract Addendum

- 다만, 공사대금 청구 및 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정해진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작성된 법정 양식(Statutory Form)을 지정하여 활용을 권고하고 있음(<표 II-4> 참조).
- 이러한 법정 양식의 활용 권고 또한 계약 관계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상대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계약 당사자의 불공정한 계약조항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임.

<표 II-4> 연방정부 조달규정(FAR) 내 계약 해지/종료와 관련된 법정 양식 사례

Subpart 49.6 Contract Termination Forms and Formats

- 49.601 Notice of termination for convenience
- 49.601-1 Telegraphic notice
- 49.601-2 Letter notice
- 49.602 Forms for settlement of terminated contracts
- 49.602-1 Termination settlement proposal forms
- 49.602-2 Inventory forms
- 49.602-3 Schedule of accounting information
- 49.602-4 Partial payments
- 49.602-5 Settlement agreement

- 49.603 Formats for termination for convenience settlement agreement
- 49.603-1 Fixed price contracts - complete termination
- 49.603-2 Fixed price contracts - partial termination
- 49.603-3 Cost reimbursement contracts - complete termination, if settlement includes cost
- 49.603-4 Cost-reimbursement contracts—complete termination, with settlement limited to fee
- 49.603-5 Cost-reimbursement contracts—partial termination
- 49.603-6 No-cost settlement agreement—complete termination
- 49.603-7 No-cost settlement agreement—partial termination
- 49.603-8 Fixed-price contracts—settlements with subcontractors only
- 49.603-9 Settlement of reservations
- 49.604 Release of excess funds under terminated contracts
- 49.605 Request to settle subcontractor settlement proposals
- 49.606 Granting subcontract settlement authorization
- 49.607 Delinquency notices

(6)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시정 목적 시공계약자협의회 운영²⁹⁾

-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지사³⁰⁾가 약 9~15명 내외의 이사(대부분 건설산업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CEO로 구성³¹⁾)를 임명하는 이사회 제도인 시공계약자협의회³²⁾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시공계약자협의회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산업에서 발주자 이익 보호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업 면허 발급 및 관리와 건설업자 계속 교육, 일반 대중을 위한 해당 주의 시공사 소개, 발주자 및 건설사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함.
- 특히, 무자격 건설업자의 건설 참여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주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사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팀을 정기적으로 현장

29) 김성일 외(2015), 전계서 주요 인용.

30) Oregon 등 일부 주의 경우 이사회 구성 시 이사 전원을 주지사가 임명하고, 주 의회(상원)의 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운영 중임.

31) Arkansas 등 일부 주의 경우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부 공무원이 이사회 멤버로도 참여하고 있음.

32) 주별 Board of Contract 또는 Contractors Licensing Board, Construction Contractors Board 등으로 명명하고 있음.

에 파견하여 불법적·불공정 행위를 단속함.

- 이 외에도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도입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계도하는 업무를 수행함.

3. 시사점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하도급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이 건설 하도급 전반을 규제하는 법률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민사법을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계약에 관여하고 있음.
- 이는 미국의 하도급계약 관계가 우리나라와 달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임.
- 따라서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관계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이며, 민간공사인 경우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함.
- 다만, 미국의 경우 하도급 거래 사항 중 가장 쟁점이 될 수 있고 수급사업자 보호가 필요한 대금지급 기일과 관련해서만 연방정부 및 주정부 모두 「PPA법」을 통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³³⁾ 모두를 규제하고 있으나, 구체적 규제 사항은 주마다 상이함.
- 특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0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주별로 상이하지만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주별 평균 16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연방 「PPA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을 ‘원사업자의 대금 수령 후 7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을 단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공공공사의 대부분이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서

33) 민간공사인 경우 일부 주 제외.

발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시 미국의 경우 대부분 우리와 유사한 하도급대금 지급 기
일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³⁴⁾

- 또한 미국은 ‘수급사업자=중소기업’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
한 다양한 하도급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실질적 중소기업 및 사회
적·경제적 약자³⁵⁾의 육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공공사업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와 관
련된 다양한 규정을 운영 중이며, 이것이 우리와의 차이점임.
- 공공공사의 경우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 일괄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동
일함. 그러나, 원사업자의 직접시공 의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이라면 직접시공을 일정비율 의무화하고
있으나, 미국 FAR 규정에서는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의 직접시공 의무를 부
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와의 차이점임.
- 이 외에도 미국의 경우 공공공사에 한해 우리나라와 같이 하도급 내용의 발주자 통보
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가 목적이 아닌 수급사업자의 실제 사업
수행 역량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에 발주자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발주자 보호
목적의 제도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비드 쇼핑(bid shopping³⁶⁾)의 경우 비윤리적이지만 합법적인 상관행으로 인정
해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³⁷⁾,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하도급 관련 규제로 의무화하여

34) 이마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호 동의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근무일 기준으로
정한 경우도 많으며, 「PPA법」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규정 외에도 발주
자와 원사업자 간의 대금 지급기일 규정 또한 제시하고 있어(49개 주 평균 기성 32일, 준공 35일), 수급사
업자만큼이나 원사업자 또한 보호하고 있음.

35) FAR에서 공공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명시한 조달 우대 기업은 SBA(미국 중소기업청)가 자국 중소기업 보
호·육성을 위하여 지정한 기업들로서, 불리 중소기업(small disadvantaged business), 낙후지역 기업
(Historical Underutilized Business Zone), 여성 소유 기업(Woman Owned), Veteran(상이용사 소유 기업·
제대군인 소유 기업) 등이 있음.

3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 받은 가격을 하도급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알려주
는 행위.

37) 단, 일부 주의 경우 anti-bid shopping제를 시행하여 bid shopping을 금지하고 있음.

시행 중인 ‘동종 업종간 하도급 제한’,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의무’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사인(私人)간의 계약을 우선시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일부 규제 사항 위반의 경우에도 사후 법적인 처벌보다는 보증제도를 통해 실제 사업 참여자(발주자 및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재수급사업자 포함))의 권익을 보증하거나, 다양한 인센티브 제시를 통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하도급 정책 운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이 우리와의 차이점임.

1. EU의 하도급 규제 개요

-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의 경우 창설 배경³⁸⁾ 및 여러 국가간 연합으로 이루어진 특수성 등으로 인해 EU법을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 ① 2009년 발효된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에 따라 제정된 「유럽연합조약」(Treaty on the European Union)
 - ② 기존 유럽공동체(EC) 설립 조약을 개정한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 이에 해당 EU법을 살펴보면, EU법에서는 하도급과 관련된 직접적인 조항이 별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대신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조항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제26조, 제101조, 제103조, 제106조, 제173조 등을 들 수 있음(<표 III-1> 참조).
 - 해당 조약 규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선언적인 사항들로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대부분 제2차 유럽법(Sekundäres Europarecht)인 규칙이나 지침(Verordnungen oder Richtlinien)에 위임함.
 - 이를 통해 2차 유럽법은 1차 유럽법(Primäres Europarecht)인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을 구체화하는 하위법이라 할 수 있음.³⁹⁾

38) 1946년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스위스 취리히 연설에서 “유럽에도 국제연합(UN)과 비슷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데에서 출발한 EU(유럽연합)는 이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거쳐 유럽공동체(EC)로 이어지고, 다시금 EC가 1993년 유럽연합(EU)으로 창립되었음.

EU는 ① 유럽 내 단일 시장 구축과 단일 통화 실현으로 유럽의 경제, 사회 발전 촉진, ② 공동 방위정책을 포함하는 공동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이행하여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이해 제고, ③ 유럽시민권제도를 도입하여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및 ‘자유·안전·정의’를 공동 영역으로 확대 발전, ④ 통합 성과인 공동체법 및 관행의 집적(acquis communautaire) 유지 및 발전을 꾀하기 위해 창립되었음. 외교부(2010), 유럽연합 개황, 요약 인용.

39) <http://www.bpb.de/nachschlagen/lexika/177209/primaeres-sekundaeres-gemeinschaftsrecht> 참조.

<표 III-1>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내용 중 하도급 관련 간접 규정

제1편 역내시장

제26조(ex Article 14 TEC)

1. 연합은 본 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역내시장을 구축하고, 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역내시장은 내부 국경이 없는 지역으로 구성하며, 본 조약의 규정에 따라 상품, 사람,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3. 이사회는 위원회의 제안에 의거하여 모든 해당 부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방침 및 조건을 정한다.

제7편 경쟁, 과세 및 법률의 상호 접근에 관한 공동규칙

제1절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

제101조(ex Article 81 TEC)

1. 회원국 상호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역내시장 내의 경쟁을 방해, 규제, 왜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같은 효과를 낳고 있는 기업 상호간의 계약, 기업 연합체가 내린 결정 및 합의된 관행은 역내시장에 위배되는 것으로 금지된다. 특히 아래와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 (a) 구매가격, 판매가격 및 기타 거래조건을 직간접으로 정하는 행위
 - (b) 생산, 시장, 기술개발 또는 투자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행위
 - (c) 시장이나 공급원을 공유하는 행위
 - (d) 다른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동일한 거래에 다른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경쟁상 불이익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행위
 - (e) 계약 상대방이 성격상 또는 상관행에 따라 계약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의무를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본 조에 따라 금지되는 계약 또는 결정은 자동적으로 무효이다.
3.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선언할 수 있다.
 - 기업 상호간에 체결한 계약
 - 기업 연합체가 내린 결정
 - 합의된 관행 등이 상품의 생산 또는 유통을 개선하거나 기술적 또는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한 몫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 :
 - (a) 이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아닌 규제사항을 해당 기업에 부과하지 않고,
 - (b) 해당 상품의 중요 부분과 관련하여 경쟁적 성격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해당 기업들에 허용하지 않는 경우

제102조(ex Article 82 TEC)

하나 이상의 기업이 역내시장 내에서 또는 역내시장의 중요 부분에 있어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회원국 상호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역내시장에 위배되는 것으로 금지된다.

상기의 남용 행위는 특히 아래와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 (a) 부당한 구매가격이나 판매가격 또는 기타 부당한 거래조건을 직간접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 (b)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생산, 시장 또는 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 (c) 다른 거래 상대방과의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다른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경쟁상 불이익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행위
- (d) 계약 상대방이 성격상 또는 상관행에 따라 계약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의무를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103조(ex Article 83 TEC)

1. 이사회는 위원회의 제안에 의거하여, 또한 유럽의회와 협의 후 제101조 및 제102조에 규정된 원칙의 실행을 위하여 적절한 규칙 또는 지침을 제정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규칙 또는 지침은 특히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진다.
 - (a) 제101조 제1항 및 제102조에 규정된 금지사항을 준수하도록 벌금 및 주기적인 과태료 납부에 관한 규정을 둔다.
 - (b) 효과적으로 감독하면서도 관련 행정업무를 최대한도로 간소화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제101조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한 세칙을 제정한다.
 - (c) 필요한 경우 다양한 경제 분야에 있어 제101조 및 제102조의 적용범위를 정한다.
 - (d) 본 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위원회 및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각각 수행해야 할 기능을 규정한다.
 - (e) 회원국 국내법과 본 절 및 본 조에 따라 채택되는 규정과의 관계를 결정한다.

제106조(ex Article 86 TEC)

1. 공기업 및 회원국이 특수하거나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 기업의 경우, 회원국은 제조약, 특히 제18조 및 제101조 내지 제109조에 위반하는 조치를 계속 시행하거나 새로 도입할 수 없다.
2. 일반적 영리 창출 서비스의 운영이 위임되어 있는 기업 또는 독점적으로 세수를 창출하는 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기업에는 제조약의 규정, 특히 경쟁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이들 기업에 위임된 특정 직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연합의 이익에 배치될 정도로 거래의 발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3. 위원회는 본 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국에게 적절한 지침 또는 결정을 시달한다.

제17편 산업

제173조(ex Article 157 TEC)

1. 연합과 회원국은 연합의 산업 경쟁력에 필요한 조건을 성취한다. 이를 위해 연합과 회원국의 조치는 개방경쟁 시장 체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
 - 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한다.
 - 기업가정신과 연합 전역의 사업 개발, 특히 중소기업의 설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 기업간 협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 혁신, 연구, 기술 개발에 관한 정책의 산업적 잠재력을 보다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회원국은 위원회와의 접촉을 통해 상호 협의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국의 조치를 상

호 조정한다. 위원회는 이 조정 작업을 하는 데 유용한 발의를 할 수 있다. 특히 방침 및 지표의 설정, 유효한 방법의 교류, 정기적인 감시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책정을 목표로 하는 유용한 발의를 한다. 유럽의회에는 모든 내용이 통지된다.

3. 연합은 제조업의 기타 규정에 따라 연합이 추진하는 정책 및 활동을 통해 제1항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보통 입법절차에 따라, 또한 경제사회위원회와 협의 후 회원국이 제1항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한 행동을 지원하는 특정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단, 모든 회원국 법과 규정과의 어떤 조화도 배제된다.

본 편의 규정은 연합이 경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조치 또는 조세규칙 혹은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는 여하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자료 : 채형복(2010), 리스본 조약, 지식경제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 따라서 제2차 유럽법에서는 건설 하도급 관련 사항에 대해, 「공공분야 계약지침(RL 2004/18/EG)」과 「공익산업에 관한 지침(RL 2004/17/EG)」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⁴⁰⁾
- 이 중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건설 하도급과 관련된 지침은 「공공분야 계약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⁴¹⁾
- EU의 「공공분야 계약지침」은 제1장 의의와 일반원칙, 제2장 공공계약 규정, 제3장 공공 건설허가 영역상의 규정, 제4장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의 경쟁제한 규정, 제5장 의무와 집행 권한 등 총 5개 장 84개 조문 및 별첨(Anhang)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지침상 하도급 관련 규정으로는 제2장 제4절(계약 체결서와 계약서에 관한 특별 조항) 제25조(하도급계약) 및 제3장 제1절(공공 건설허가 영역에 있어서의 규정) 제60조(하도급계약)에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동 지침의 경우 역내 회원국의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한 상위 지침 개념의 제정 목적을 갖고 있는 EU법의 특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하도급 규제 사항을

40) EU법의 경우 각 개별 회원국의 법령 제정을 위한 상위 가이드라인 성격의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민간사업에 관련된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며, 반면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공공 조달과 관련된 사항이 제2차 유럽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41) EU의 공공 분야 계약·조달 지침은 2016년 4월까지 「공공분야 계약지침(RL 2004/18/EG)」과 「공익산업에 관한 지침(RL 2004/17/EG)」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공공분야 계약지침」은 건설 및 건설 하도급과 관련된 지침이며, 「공익산업에 관한 지침」은 물, 에너지, 교통 우편, 서비스에 관한 공공조달 지침이기에 본서에서는 「공공분야 계약지침」을 우선적으로 살펴봄.

담고 있지 않음.

- 이 외에도 최근 EU에서는 공공조달 절차의 단순화 및 보다 탄력적인 절차의 운용,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 신설 등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18일부터 기존 「공공분야 계약지침」을 개정한 새로운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을 제정하여 운영 중임.
 - 개정된 「공공조달지침」에서의 건설 하도급 관련 규정은 제2편(공공계약에 대한 규칙) 제3장(절차상 행위) 제4절(계약의 이행) 제71조(하도급 계약)를 통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역내 회원국의 경우 개정된 EU지침을 고려한 회원국별 관련 법령 개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공분야 계약지침(RL 2004/18/EG)」과 개정된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 하도급 규제 사항을 모두 검토함.
- 다음은 EU법(기존, 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임.

2. EU의 하도급 규제 현황

(1) 공공 건설공사시 하도급 계약 자료 공개

- 기존 EU 법령(「공공분야 계약지침」)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발주 시 원사업자의 하도급 계약 체결에 따른 발주자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낙찰된 공공공사 수행을 위해 하도급 시행을 계획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정보를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발주자에게 부여하고 있음.
- 또한 원사업자가 특정인을 수급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사전 제안하여 발주자가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부여하고 있음.

공공분야 계약지침(Richtlinie 2004/18/EG)

제2장 공공계약을 위한 규정

제25조 하도급 계약(Unteraufträge)

공공 발주자는 계약서상에 원사업자에게 혹은 회원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바,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계약 안에서 경우에 따라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거나, 이미 수급사업자(하도급자)가 제시되었다면 이를 공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된 책임이 있는 경제 참여자의 책임은 이를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 이러한 하도급 계약 자료(정보) 공개 규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사적 계약으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발주자로 하여금 하도급 정보를 파악토록 하여 사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임.
- 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어떤 비율, 어느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시행하는지에 대해 발주자에게 알리고 또 수급사업자를 공개하게 하여 낙찰자와 수급사업자 간 사적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발주자가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감소하기 위한 목적임.
- 다만, EU의 공공공사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규정은 우리나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3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항상 의무적으로 하도급공사 계약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와 동일한 제도 운영이라고는 볼 수 없음.
- 우리나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3에서는 공공 발주자의 경우 하도급공사 계약 자료를 하도급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EU의 경우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하도급 계약 자료 공개를 선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임.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EU의 경우에는 하도급 계획 단계(입찰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수급사업자를 사전 선정할 경우 하도급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개 시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함.

(2) 공공 건설공사시 원사업자의 최소 분담비율 지정(직접시공 의무)

- 기존 EU 법령(「공공분야 계약지침」) 제60조(하도급계약)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시행할 도급 총액 대비 최소 분담비율(30%)을 적시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공분야 계약지침(Richtlinie 2004/18/EG)

제3장 공공 건설허가 영역에 있어서의 규정

제1절 공공 건설허가를 위한 규정

제60조 하도급 계약(Unteraufträge)

공공 발주자는 다음 두 가지를 사전에 요구할 수 있다.

- (a)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주는 건설 허가 대상이 되는 도급 총액의 최소 30%를 하도급하며, 이때 원사업자는 이 범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건설 허가계약에서 최소 비율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 (b) 혹은 원사업자는 그 가능성이 전제되는 한, 건설 허가 대상이 되는 도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할지를 스스로 결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와 같이 공공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최소 일정 비율의 공사는 반드시 원사업자가 직접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함.⁴²⁾
- 즉, 건설 계약상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관계에 있어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최소 일정 비율은 반드시 원사업자가 직접 시공해야 함을 제시한 것으로, 이에 따라 EU의 회원국들이 공공사업에 있어 공사 총액 대비 일정 비율은 원사업자가 스스로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됨.⁴³⁾
- 이를 통하여 실제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사 목적물의 품질 수준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됨.

42) 우리나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1건의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하일 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동법 시행령에는 3억~50억원 미만인 경우로 구체적으로 직접시공 비율 명시) 원사업자가 직접 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EU의 경우 공사금액별로 직접시공 비율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43) 강기홍(2011),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 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EU·독일, 한국법제연구원.

- 하지만 최근 개정된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에서는 이러한 최소 분담 비율 규정이 삭제되었음.

(3) 공공 건설공사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규정, 재하도급 허용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의 새로운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에는 건설 도급계약에 있어 기존 「공공분야 계약지침(RL 2014/18/EG)」에서 명시하였던 최소 분담비율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반면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 규정이 신설되었음(기존 발주자의 수급사업자 관련 정보 요청 규정은 존속).

EU 공공조달 지침(Directive 2014/24/EU)

제2편 공공계약에 대한 규칙

제3장 절차상 행위

제4절 계약의 이행

제71조 하도급계약

- ① 발주자는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 내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부분 및 하도급 예정자를 입찰 서류에 특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거나 요구할 것을 회원국으로부터 요청 받을 수 있다.
- ②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며, 계약의 성질상 가능할 경우 회원국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였던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예컨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지급된 대금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대금 지급 방법은 조달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 ③ 1~2항의 내용은 원도급자의 법적 책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④ 공사용역 등 특정한 경우 발주자는 원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용역 등이 개시되기 전까지 원사업자로 하여금 발주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이름, 연락처 및 대표자의 정보를 알리도록 해야 한다. 발주자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발주자에게 위 정보의 변경 사항 및 새로운 수급사업자의 정보 발생시 통보해야 한다. 위 의무는 재수급사업자(재하도급자)들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b) 발주자는 특정 수급사업자를 배제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힐 수 있다. 이때 발주자가 특정 수급사업자를 배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경우라면 발주자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를 교체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특정 수급사업자를 임의 배제한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회원국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대금지급 의무에 관해 개별 국내법보다 더 엄격하거나 혹은 개별 국내법 하에서 더 강하게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가 자신에게 직접 대금지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설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규정은 원사업자에 의한 불공정 행위(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거부·감액 등) 방지를 위해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규정보다 더욱 강력한(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등) 회원국 개별 법률 또한 제정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 외에도 동 규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해 2차 이하 수급사업자(재하도급자)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와는 달리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재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⁴⁴⁾

(4)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 및 대금지급 지체시 지연이자 규정

- EU법에서는 원·하도급 관계의 대금지급 지체와 관련해 별도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상거래(commercial transactions) 시 대금지급 지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대금지급 지연 규정(Directive 2011/7/EU)」을 적용하고 있음.⁴⁵⁾
- 동 규정에서는 공공공사(제4조) 및 민간공사(제3조) 모두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기간은 별도 계약서를 통해 규정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60일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대금 청구 시 30일 이내에 원사업자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사업자가 수락 혹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 또한 30일 내로 규정하고 있어 최대 60일을 대금지급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4)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항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을 법에서 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음.

45) EU의 「대금지급 지연규정(Directive 2011/7/EU)」은 건설산업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산업을 법률의 적용 범위로 두고 있음.

Combating late payment in commercial transactions(Directive 2011/7/EU)

사적인 거래관계(제3조)

- ① 사적인 거래관계에서 채권자는 (i) 자신의 계약상, 법령상 의무를 다하였고, (ii)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대금 지체에 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음.

(중 략)

- ③ (b) 계약상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지 30일이 지난 이후부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음.
- ④ 원사업자가 수락 혹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음. 다만 그 기간이 채권자(수급사업자)에게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을 경우 30일이 넘는 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음.
- ⑤ 대금지급 기간은 최대 60일을 넘을 수 없음. 다만 그 기간이 채권자(수급사업자)에게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을 경우 30일이 넘는 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도 있음.

공공조달 관계(제4조)

(중 략)

- ④ 발주자가 (i) 공업/상업상 경제활동을 하며 「Directive 2016/11/EC」상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이거나, (ii)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기관일 경우 대금지급 기간을 30일에서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경우 European Commission 등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3. 시사점

- EU의 지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내 회원국들의 법령 제정 및 정책 수립의 근거 법을 제시하고 있는 EU법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처럼 건설 하도급 전반을 다룬 법령은 존재하지 않음.
 - 다만, 공공 발주 사업에 한해 원도급계약 지침 내 일부 하도급 관련 규정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는 달리 상세하게 건설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는 더욱 그러함.
- 하지만 하도급 대금지급 기한의 경우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기한의 경우 최대 60일로 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하도급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 대금 청구 시 60일과 동일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대금지급 기한과 연계한 하도급공사의 검사 및 인도 시기 규정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검사 요청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EU의 경우에는 30일로 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엄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이 외에도 공공공사에 한해서만 ‘직접시공’, ‘일괄 하도급 금지’, ‘하도급 내용의 발주자 정보 공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공공사업의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 내용을 제외한다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호 수평적·대등적 환경에서 계약을 통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독일의 하도급 규제 개요

- 독일의 하도급 법제 및 규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독일 「연방행정절차법(VwVfG)」 및 민간 간 도급계약(Wekvertrag)을 규율하고 있는 「민법(BGB)」, 「경쟁제한방지법(GWB)」 등 3가지 법률을 살펴보아야 함.
- 이는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공공 계약에 관한 일반원리 규정으로 「연방행정절차법」을 통해 공공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일한 내용들이 각 주의 행정절차법에도 입법되어 있기 때문이다.⁴⁶⁾
 - 또한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경쟁제한방지법」의 하위 개념으로 도급시행령(VgV)과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는 발주 규칙⁴⁷⁾을 두고 하도급과 관련한 규제를 하고 있음.
- 하지만 독일의 경우 다른 국가와는 달리 하도급공사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⁴⁸⁾ 「민법」 및 다른 법률에서는 하도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규는 존재하지 않으며, EU의 「공공조달지침」 및 「경쟁제한방지법」에 따른 「건설공사 도급규칙(VOB⁴⁹⁾)」⁵⁰⁾

46) 독일 또한 미국과 같은 연방제를 운영하고 있음. 독일의 연방제에 따라 16개 주는 국방과 외교 문제를 제외하고 자체적 주별 헌법을 근간으로 통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주별로 행정절차법을 별도 제정·운영하고 있음. 정재각(2011), 독일연방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47) 독일의 발주 규칙은 ① 건설공사 도급규칙(VOB), ② 물품 구매 등 일반규칙(VOL), ③ 자유업 용역발주 규칙(VOF)의 3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48) 독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마이스터(Meister)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에 따라 마이스터 자격을 취득한 작업반장이나 장비업자에게 직접 발주(원도급)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독일 공공공사의 경우 평균 30~40개에서 최대 120개 공종의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어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생산체계의 하도급공사가 일반적이지 않으며, 대부분 개별 원사업자의 직접시공이 대부분임(개별 원사업자의 직접시공 비율은 베를린주 및 바이에른주 기준 70% 이상임).

49) Vergabe und Vertragsordnung für bauleistungen.

50) 1926년 최초 제정된 VOB의 제정 사유는 「민법」의 경우 강제성이 없고, 도급계약의 일반 규정은 건설 도급

에서만 하도급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

- 독일법상 건설 하도급 근거 규정은 「건설공사 도급규칙(VOB)」 내 「건설도급에 관한 일반규정(VOB/A)」과 「건설공사 시공을 위한 일반계약조건(VOB/B)」임.
- 이 중 하도급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칙은 VOB/B라 할 수 있음.

VOB/A 1편(Abschnitt 1) 제8조(§8 Abschnitt 1 VOB/A) 도급서류(Vergabeunterlagen)

제6항 : 계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들이 추가적인 계약조건 혹은 특별한 계약조건에 규정되어야 한다.

- a) 서류(제8조 제9항, 제3조 제5항, 6항 VOB/B)
- b) 시설과 근로 장소, 차량 진입로, 연계 철도, 물과 에너지 이용 연결(제4조 제4항 VOB/B)
- c) 하위 기업에 대한 하도급(제4조 제8항 VOB/B)
- d) 시공 기간(제9조 제1항, 4항, 제5조 VOB/B)
- e) 손해배상(제10조 제2항 VOB/B)
- f) 계약 제재와 특별 사례금의 지급(제9조 제5항, 제11조 VOB/B)
- g) 인수(제12조 VOB/B)
- h) 계약 종류(제4조), 결산(제14조 VOB/B)
- i) 시간근로(제15조 VOB/B)
- j) 지급, 선불(제16조 VOB/B)
- k) 안전 능력(제9조 제7항, 8항, VOB/B)
- l) 법원 관할(제18조 제1항 VOB/B)
- m) 수입과 월급비용
- n) 계약 가격의 변경(제9조 제9항)

VOB/B 제4조 제8항(§ 4 Absatz 8 VOB/B)

제1호

도급자(Auftragnehmer, 원사업자)는 자신의 기업이 스스로 조업하여(im eigenen Betrieb)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발행하는 서류상의 동의를 기반으로 시공을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게 위탁하여도 된다. 이 동의는 도급자(원사업자)가 자신의 조업으로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필요하지 않다. 도급자(원사업자)가 직접 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동의 없이 직접 시공을 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도급자(원사업자)가 적절한 기간 내에 직접 시공을 하도록 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 계약을 취소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제8조 제3항).

및 하도급에 적합하지 않아 건설 도급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법적인 규율을 보충하고, 계약 체결에 있어 강제성을 가진 계약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서임.

제2호

도급자(원사업자)는 하위 기업에 대해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공사를 위한 도급과 계약 규칙 B파트 및 C파트(VOB/B, C)를 준용해야 한다.

제3호

하도급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하도급자)가 누구인지 발주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자료 : 강기홍(2012), EU와 독일법상 공공조달제도, 공법학연구, 13(1) 495-521.

- 다만, 독일의 「건설공사 도급규칙(VOB)」은 공공사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 해당 규칙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음.⁵¹⁾
- 민간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을 사적 계약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어 자율적 판단에 따른 선택적 적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우리와의 차이라 할 수 있음.
- 다음은 독일의 「건설공사 시공을 위한 일반계약조건(VOB/B)」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 하도급 규제 사항임.

2. 독일의 하도급 규제 현황

(1) 원사업자 직접시공 의무와 예외 규정⁵²⁾

- 독일 건설공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발주자와 도급자(원사업자) 사이의 건설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의 기업을 통한 시공이 허용되지 않음.
- 건설공사는 특별히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긴밀한 신뢰 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51) 1947년 이후 공공기관(연방 행정부, 주 행정부, 지방대표연합회)의 대표 및 구성원들과 건설경제를 이끌어 가는 계약수급자 대표 기관인 ‘독일 도급과 계약위원회(DVA)’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된 「건설공사 도급규칙(VOB)」은 법적 능력이 없는 단체(Verein)에서 규정한 규칙이기에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민법」상의 일반영업조건(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에 해당하나, 연방 및 주 정부의 공공공사 조달 시 별도의 공공계약 규칙에서 지정한 사항이 아니면 해당 규칙을 준용하고 있음.

52) 강기홍(2011), 전제서 ; 강기홍(2012), 전제서, 주요 인용.

이 같은 신뢰 관계가 개인적인 연결(Persönliche Bindung)이 전제되어야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 「건설공사 시공을 위한 일반계약조건(VOB/B)」 제4조 제8항 제1호에 규정⁵³⁾된 원사업자의 직접시공 의무(Eigenleistungsverpflichtung des Auftragsnehmers)는 원사업자의 기업에 속한 인력으로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다만, “자신의 기업이 스스로 조업(im eigenen Betrieb)한다”라는 의미는 원사업자 자신의 기업 내지 그 소재지에서 시공해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업의 장소는 어디든 상관없고, 단지 해당 시공에 적합한 전문적인 적합성(fachliche Eignung)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함.
- 반면, VOB/B에선 이러한 직접시공 의무 규정의 예외 규정 또한 제한적으로 마련하여 하도급의 허용 또한 일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VOB/B의 하도급 허용의 전제 조건은 ① 발주자의 서면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수급사업자의 업무 범위상 핵심 공종이 아닌 부대 공종인 경우에만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직접시공의 예외 1 : VOB/B 제4조 제8항 1호 2문 - 하도급의 전제조건

- VOB/B 제4조 제8항 제1호 제2문에 규정된 직접시공의 예외로 하도급이 허용되려면 도급자의 동의를 문서의 형태로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을 위탁한다”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계약 파트너(Vertragspartner des Auftragnehmers)가 되어 독일 「민법」 제278조에 따른 이행 보조자(Erfüllungsgehilfe)가 된다는 뜻임.

직접시공의 예외 2 : VOB/B 제4조 제8항 1호 3문 - 동의/승인 없이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 VOB/B 제4조 제8항 제1호 제3문에는, 원사업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도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전제 조건으로 원사업자가 자신의 생산 능력이나 시설들을 고려할 때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생산 능력이나 시설의 부족 부분이란 전체 공사의 핵심적 부분이 아닌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전체 공사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아예 원천적으로 도급재(원사업자)로 낙찰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임.

53) “도급자(Auftragnehmer)는 자신의 기업이 스스로 조업(im eigenen Betrieb)하여 공사를 시공해야 한다.”

- 이러한 원사업자의 직접시공 의무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 스스로 공사를 직접 시공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승인 및 동의 없이 하도급을 시행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일정 기간을 주어 직접시공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계속해서 하도급을 시행할 경우) 정해진 개선 기간이 경과한 후 발주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함.

(2) 하도급 정보 제공 의무(수급사업인 통보 의무)⁵⁴⁾

- 「건설공사 시공을 위한 일반계약조건(VOB/B)」 제4조 제8항 제3호⁵⁵⁾에서는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발주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정보를 포함한 하도급 계약 사항을 발주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⁵⁶⁾
- 하도급 정보 제공의 범위는 수급사업자의 이름, 주소지, 기타 발주자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함.
-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하여 발주자는 어느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건설공사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VOB/A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사전에 알 수 있음.
- 또한 동 규정은 역량을 갖춘 수급사업자 선정을 통한 공사 품질 확보 등 발주자 보호 목적 외에도 해당 규정을 통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도 활용되고 있음.
- 이는 발주자가 하도급 정보 제공 의무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시행에 따른 공사 대금을 적절한 시기 및 방법으로 지불하고 있는지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임(VOB/B 제16조 제6항 참조).

54) 강기홍(2011), 전계서 및 강기홍(2012), 전계서, 주요 인용.

55) “하도급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누구인지 발주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56) 또한 본 규정은 상위 법령이라 할 수 있는 EU의 공공조달 지침(Directive 2014/24/EU)과 동일한 사항임.

(3) 하도급대금 지급 및 하도급 관련 정보 서면 교부, 기타 하도급 규정⁵⁷⁾

- 「건설공사 시공을 위한 일반계약조건(VOB/B)」 중 기타 하도급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련 정보 서면 교부’ 및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VOB/B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 정보 서면 교부’ 규정을 살펴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 구두 지시 등 관련 서류를 지체나 대가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 「하도급법」 제3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2항과 같이 하도급계약의 서면 교부 의무화를 통해 원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추후 변경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VOB/B에서는 하도급 계약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맺은 사업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계약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음.
 - 즉, VOB/B에서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이 완료되어 공사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즉시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계약서상 수급사업자가 준공물을 원사업자에게 인도 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 수령 시 하도급대금 지급 등의 정지조건부 지급(Pay-if-paid)⁵⁸⁾ 약정을 체결할 수 없음.
 -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금액 합의를 통해 분할 지급을 준공 이전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대금의 지급은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57) 김관보 외(2015), 전거서, 주요 인용.

58) 정지조건부 지급 규정(停止條件附支給, Pay-if-paid clause)이란 발주자가 그의 재정 사정상 또는 분쟁으로 인해 원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는 원사업자의 리스크이므로, 하도급계약 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적기에 수령하지 못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규정을 의미함. 즉, 정지조건부 지급 규정이 있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 받지 못하면, 수급사업자도 하도급대금을 수령 받지 못하는 지급 규정을 의미함.

업무를 완성한 후 분할 지급을 요청(청구)한 정산일을 기점으로 영업일 기준 18~24일 사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⁹⁾

- 이 외에도 VOB/B에서는 계약 불이행 등 수급사업자로 인한 피해에서 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규정도 마련하고 있음.
 - ①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추가 공급이나 급부의 변경에 따른 책임을 무한히 지는 것을 일정 수준 제한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추가 정산 요구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②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위탁 목적물(공사 목적물)의 인수 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하자를 보수할 것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함.
 - ③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계약 기간 내 위탁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는 등 계약 지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 대금의 0.3%/일 이내에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시사점

- 독일의 하도급 관련 법·제도 또한 우리나라의 「하도급법」과 같은 특별법 성격의 별도 법률은 없는 대신 공공계약을 위한 법 체계를 통하여 일부 하도급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민간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계약을 사적계약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어 자율적 판단에 따른 선택적 적용을 하도록 규정함.
 - 즉,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공공계약에서만 하도급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 또한 법령이 아닌 표준 일반조건의 형태로 규율하고 있음.
- 그 규제 내용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준수’, ‘직접시공 의무제’, ‘하도급 내용의 받

59) 독일의 경우 또한 VOB/B 제16조 제6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연할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도 드물다고 함[김관보(2000)].

주자 통보' 등 상위 지침인 EU법에 규정된 내용에 그치고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독일의 경우 평균 30~40개에서 최대 120개 공종으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비율이 70% 이상으로 대다수의 공공공사가 원도급으로만 이루어지는 독특한 건설산업 구조 및 문화에 기인함.
- 독일의 경우 전통적으로 건설 기능인력인 마이스터(Meister)를 중시하여 마이스터 자격을 취득한 작업반장이나 장비업자에게 직접 발주하는 형태⁶⁰⁾이므로 일반적으로 하도급을 미시행함.

60) 현행 우리나라와 같이 업역 자체가 종합·전문 건설로 나누어져 있지 않으며, 발주기관의 역량 또한 우리나라의 종합건설업체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1. 영국의 하도급 규제 개요

- 영국의 건설 계약은 주로 판례가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관습법(common law)의 전통에 따라 규율되고 있음.
- 하지만 앞서 살펴본 독일의 사례와 같이 EU법은 각 회원국 내 개별 국내법보다 우선적(principle of primacy)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EU 회원국인 영국도 공공 조달과 관련하여 EU 지침을 따르고 있음.⁶¹⁾
- 이에 영국 건설 분야의 경우, EU의 「공공조달지침 개정(Directive 2014/24/EU)」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공공조달 관련 통합 지침(SI 2015 No. 102, 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 2015)」을 제정해 적용하고 있음.
- 또한 영국은 「공공조달지침」을 통한 공공공사 규율 외에도 민간공사를 종합하여 아우르는 「신건설업법(The New Construction Act)」을 통해 발주자를 비롯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건축사 등 건설과 관련된 전 사업 참여자를 포함하는 건설계약 규제 법률을 운영 중이며, 동 법률을 통해 하도급 관계 또한 규율하고 있음.
- 1996년 제정된 기존 「건설계약에 관한 법률(The Housing Grants, Construction and Regeneration Act)」⁶²⁾을 지난 2009년 개정된 「신건설업법」의 실제 법령명은 「The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로, 이중 「신건설업법」은 ‘Part 8 건설계약’ 부분을 뜻함.⁶³⁾

61) 2016년 6월 24일 영국의 국민투표에 따른 EU 탈퇴가 결정되었으나, 2016년 12월 현재 영국의 EU 탈퇴 일정 및 탈퇴 협상 절차 등이 미확정된 상태(영국 정부는 2017년 3월 내 EU 탈퇴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발표(2016.10.3)하였으나, 영국 법원은 EU 공식 탈퇴를 위해서는 의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제동(2016.11.4.)을 거는 등 혼선 상태임)이고, 관련 법령이 미개정되어 현 상태 기준으로 분석을 시행함.

62) Construction Act라고 불림.

63) Yosof Ewing(2009), The New Construction Act 2009 - The New Act and What You Need to Know, http://constructpro.com/wp-content/uploads/2014/11/Construction_Act_2009.pdf.

- 이 외에도 「신건설업법」의 위임에 따라 2차적인 하위 규정으로 「건설계약규정지침(The Scheme for Construction Contracts Regulations)」을 마련하여 건설산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⁶⁴⁾
- 다음은 영국의 「공공조달 관련 통합 지침」 및 「신건설업법」, 「건설계약규정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 하도급과 관련된 주요 규제 사항임.

2. 영국의 하도급 규제 현황

(1) 하도급 정보 제공 의무와 특정 수급사업자 배제 규정, 재하도급 허용

- 영국의 경우 또한 EU의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영국 「공공조달 관련 통합 지침」을 통해 수급사업자 및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해당 규정은 공공사업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민간사업에까지 폭넓게 적용하고 있지 않음.
- 또한, 동 규정에 재수급사업자가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2차 이하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 외에도 해당 규정에서는 발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특정 수급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발주자에게 부여하고 있음.

64) 1998년 최초 제정된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방 적용)의 「건설계약규정지침」은 최근 2011년 개정되어 본 연구에서는 필요시 기존 「건설계약규정지침」은 「구건설계약규정지침」으로, 2011년 개정된 「건설계약규정지침」은 「신건설계약규정지침」으로 명시함.

영국 공공조달 관련 통합 지침(SI 2015 No. 102, 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 중 발주자에 대한 수급사업자 정보 제공 및 특정 수급사업자 배제 관련 규정

제71조 하도급 : 계약 당국에 관련 정보 제공

- ① 발주자는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로 하여금 계약 중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부분 및 하도급 예정자를 입찰 서류에 명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④ 발주자는 특정 공사용역 등 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사업이 개시되기 전까지 원사업자로 하여금 발주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이름, 연락처, 대표자(법정 대리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⑦ 발주자는 상기 4항의 요구를 재수급사업자(자재계약 및 용역계약 등 계약당국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놓인 전체 계약)들에게도 확장할 수 있음.
- ⑧ 발주자는 규제 57에 따라 특정 수급사업자를 배제할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음.
- ⑨ 발주자가 특정 수급사업자를 배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자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를 교체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발주자가 특정 수급사업자를 임의로 배제한 경우라면 발주자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를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2) 하도급 서면 계약 의무화

- 영국 또한 우리나라 및 독일 등과 같이 「공공조달 관련 통합 지침」 및 「신건설업법」을 통해 하도급계약 체결 시 서면 계약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 특히, 「신건설업법」에서는 건설사업 참여자의 모든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서면 계약으로 의무화(일부 서면과 구두 혼합 계약 또한 합법적)하고 있음.⁶⁵⁾
- 또한 「신건설업법」의 적용 범위가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를 포함하고 있기에 민간 발주 공사에서도 서면 계약이 의무적으로 규정됨.

영국 공공조달 관련 통합 지침(SI 2015 No. 102, 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 중 하도급 서면계약 의무화 규정

제84조 보고 및 문서화 요구사항

- (a) 수급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이름과 하도급 내역 등을 포함하여 낙찰자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65) Steven Evans, Payment under the new 'Construction' Act - a Practical Guide, Steven C Evans Ltd., <http://www.stevencevans.com>.

(3)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

- 영국의 경우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독일 등과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신건설업법」 및 「공공조달 관련 통합 지침」, 「건설계약 규정 지침」 등 건설과 관련된 모든 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은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기에 매우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면, 우선 「신건설업법」에서는 「구건설업법(The Housing Grants, Construction and Regeneration Act)」 제110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 간의 기성일자와 최종 지급일자(준공금 지급일자)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및 미국 등과 같이 대금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⁶⁶⁾
- 반면, 「공공조달 관련 통합 지침」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유효한 대금지급 청구서를 받은 지 3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을 통해 변경하지 못하도록 강제화한 것임.
- 따라서 공공사업⁶⁷⁾인 경우 대금 지급 기한을 의무적으로 청구일 기준 30일로 규정하고 있음(수급사업자와 재수급사업자 간의 대금 지급도 동일 규정 적용).

영국 공공조달 관련 통합 지침(SI 2015 No. 102, 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 중 하도급 대금지급 규정

제113조

- ① 본 규정은 NHS에서 발주한 의료 서비스 및 학교 및 대학기관과 체결한 계약 외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함.
-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유효한 대금지급 청구를 받은 지 3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송장 등에 의한 지급청구를 부당하게 늦게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사업자와 재수급사업자

66) 영국의 경우 단일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건설대금 지급 방안을 정하기 위해서는 「신건설업법」 및 새로운 「건설계약규정지침」이 발간되었더라도 구법의 내용을 동시 고려해야 함(대금지급 관련해 고려가 필요한 서류 : 계약서, 「구건설업법」, 「신건설업법」, 「구건설계약규정지침」, 「신건설계약규정지침」).

67) 학교 및 대학기관에서 발주한 공공 건설사업은 제외.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③ 만일 계약서에 상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항의 내용은 계약의 내용으로 간주됨.

- 「신건설업법」의 하위 규정인 「건설계약규정지침」의 경우에는 도급 및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별도의 대금지급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금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있어 공공공사와 같이 강제화된 규정은 아니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기성금의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정한 기일 이후 7일 이내 또는 만기일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대금 지급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준공금의 경우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또는 만기일 중 늦게 도래하는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의 건설계약규정지침(The Scheme for Construction Contracts(England & Wales) Regulations) 중 대금지급 기일 규정

당사자 간에 대금의 종류 및 대금지급 기일 또는 이 두 가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 당사자 간에 정한 (기성금) 기일의 7일 이내 또는 만기일, 대금 수령 대상자가 대금을 신청할 경우 두 가지 중 늦게 도래하는 일자를 대금지급 일자로 정한다. 대금 요청이 7일 이후라면 대금요청일이 대금지급일이 된다.

적절한 건설계약 하에 이루어지는 준공(완성/최종)금은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또는 대금 신청 요구가 있을 경우 두 가지 중 늦게 도래하는 일자를 대금지급 일자로 정한다.

적절한 건설계약이 아닌 경우(건설계약이행의 하자)도 대금은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또는 대금 요청일 중 늦게 도래하는 일자에 지급한다.

상기 사례 이외의 대금 지급은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 또는 대금 요청이 있을 경우 두 가지 중 늦게 도래하는 기일을 대금지급 기일로 정한다.

- 따라서 영국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자유 원칙을 고려해 강제화된 대금지급 기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계약 체결 당사자간 사전 합의를 통해 대금의 종류 및 대금지급 기한을 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 외에도 대금 지급과 관련된 「신건설업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독일 등과 같이 기존 「건설업법」에서 허용되었던 원사업자의 발주자 대금 수령 후 수급사업자 대금 지불(Pay-if-paid)을 금지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합리한 대금 지불 지연을 방지하고 있음.

(4)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규정

- 영국 또한 공공사업에서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조항(direct payment to nominated subcontractor)이 존재하나 그 적용 사례는 매우 드물.⁶⁸⁾
 - 이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를 별도 지명하는 방식인 지명하도급 방식(nominated subcontractor)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임.
 -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전체 1차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직불제도와는 상이함.
- 이러한 제한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국 JCT(Joint Contract Tribunal)⁶⁹⁾의 공사계약 표준약관에는 지난 2005년 이후 직접지급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최근 EU의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직접지급 규정이 EU 지침을 통해 신설되었기에 이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해 영국에서는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68) Building 매거진 기사(2014.2.28), Payment to subcontractors : The direct approach.

69) 영국의 경우 독일의 VOB와 같은 성문화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에서 발행한 표준계약 서식이 발행된 이후 다양한 기관(RIBA, JCT, ICE, NEC 등)에서 발표하고 있는 표준계약 약관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음. 이 중 The Joint Contract Tribunal(JCT)의 표준계약 서식(JCT 2011)은 「신건설업법」에 따라 최근 개정되었으며, 영국 내에서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 Lindy Patterson, JCT contracts and the Construction Act, Building.co.uk 기고문(2011.07.15).

3. 시사점

- 영국 또한 앞서 살펴본 미국, 독일 등과 같이 특별법을 통해 건설 하도급 전반을 규제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에 관계된 발주자 및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설계자 등 전체 사업 참여자를 포함하는 건설계약 규제 법률인 「신건설업법」을 통하여 일부 하도급 관련 규제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공공계약의 경우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EU의 지침에 따른 추가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 좀 더 구체적으로 공공 및 민간 공사에 함께 적용하는 하도급 관련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금지급 기한 준수’ 및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 의무화’ 등 최소한의 규제에 그치고 있음.
 - 「공공조달 관련 통합지침」을 적용받는 공공공사에서도 ‘하도급 정보 제공 의무화’ 등 발주자 보호 및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명시하고 있어 사인(私人)간의 계약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 외에도 영국의 경우 공공공사 수행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를 지명 수급사업자(Nominated Subcontractor)로 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와는 다를 수 있음.

1. 프랑스의 하도급 규제 개요

- 프랑스 또한 하도급과 관련된 별도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등 광범위한 하도급 계약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만 법령(「하도급에 관한 법률(Loi n° 75-1334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ous-traitance), LST」)을 제정해 공공 및 민간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직접지급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⁷⁰⁾

하도급에 관한 법률 제75-1334호(1975년 12월 31일 제정, 2016년 7월 14일 개정)
(Loi n° 75-1334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ous-traitance)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하도급(sous-traitance)’이란 원사업자(entrepreneur)가 발주자(Maitre de l'ouvrage)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공공계약의 일부를 자신의 책임 하에 하도급계약을 통해 수급사업자(sous-traitant)로 불리는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 또한, 공공공사의 경우 「공공계약에 관한 정령(Décret n° 2016-360 du 25 mars 2016 relatif aux marchés publics)」 제2장 하도급을 통해서도 하도급에 관한 법률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70) 프랑스의 경우 「하도급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는 노동법전 제143-6조(1953년 5월 11일 décret로 편입, 1973년 3월 14일 décret로 개정)의 규정에 의해 처음으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이를 공공공사의 경우에 적용하였으므로, 민간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원사업자의 파산 시 수급사업자의 대금채권 담보 수단이 확실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모든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본 법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위험에 대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임(공공 및 민간 공사 적용). 박수곤(2004), “프랑스에서의 하도급법에 대한 개관 : 건축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담보 수단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25), 371-404..

- 즉, 프랑스의 「하도급에 관한 법률」은 일본의 「하청법」과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하도급과 관련된 법률 제정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발주자의 권리 또한 일부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단, 프랑스에서는 일본과 다르게 건설 관련 부처⁷¹⁾에서 하도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하도급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는 건설산업에 국한된다는 게 차이점임.
- 다음은 프랑스의 「하도급에 관한 법률(LST)」 및 「공공계약에 관한 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 하도급과 관련된 주요 규제 사항임.

2. 프랑스의 하도급 규제 현황

(1) 하도급 사전 승인(하도급 정보 제공 의무) 및 하도급 대금지급 조건 승인

- 프랑스의 경우 발주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부적절한 수급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발주자 권리 보호를 꾀하고 있음.
- 이러한 ‘하도급 사전승인제’는 「민법(Code civil)」 제1237조⁷²⁾에 따라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발주자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하도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하도급을 원하는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임.

71) 프랑스의 경우 정부 부처의 범위와 역할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2016년 11월 이전까지 건설 관련 담당 부처는 환경·국토개발·국토정비부(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et de l'Aménagement durables) 소관이었으나, 최근에는 해당 부처의 업무가 마을 및 국가개발·지방행정 및 지방당국부(Ministère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de la Ruralité e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환경 및 에너지, 해양부(Ministère de l'Environnement, de l'Énergie et de la Mer), 주택 및 지속가능한 주거부(Ministère du Logement et de l'Habitat durable)로 분리되었음(주요 관련 사항은 주택부 소관임).

72) “L’obligation de faire ne peut être acquittée par un tiers contre le gré du créancier, lorsque ce dernier a intérêt qu’elle soit remplie par le débiteur lui-même.”

하도급에 관한 법률 제75-1334호(1975년 12월 31일 제정, 2016년 7월 14일 개정)

(Loi n° 75-1334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ous-traitance)

제1장 일반규정

제3조

원사업자는 하나 이상의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 또는 계약 기간 동안 각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하도급대금 지급 조건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에 대한 승인 및 하도급대금 지불 조건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제2장 직접 지급

제5조

제3조에 명시된 승인과는 별도로 원사업자는 하도급이 예상되는 각 사업의 성격 및 대금 총액과 자신이 염두에 둔 수급사업자를 발주자에게 입찰 시 고지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계약의 이행과정 중 새로운 수급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사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 또한 공공 발주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도 ‘수급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대한 승인(제113조)’을 의무화하고 있음.
- 이 외에도 동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지불 조건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134조를 통해 구체적인 하도급 및 하도급대금 지불 조건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2016년 3월 27일 프랑스 관보 제0074호

공공계약에 관한 법령(법령 제2016-360호, 2016년 3월 25일 개정)

(Décret n° 2016-360 du 25 mars 2016 relatif aux marchés publics)

제4편 계약의 이행

제2장 하도급 관련 규정

제113조

공공계약의 발주자는 2015년 7월 23일 조례 62조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되, 발주당국으로부터 각 수급사업자에 대한 승인 및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금 지불조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34조

각 수급사업자 승인 및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불 조건 승인은 다음 조건에 의거하여 요청한다.

1.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을 요청하는 경우 입찰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신고서를 발주당국에 제출한다.
 - a) 하도급 예정인 과업의 성격
 - b) 추천할 수급사업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
 - c)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불 방식으로 지급할 금액의 상한선
 - d) 하도급계약 초안에 규정된 지불조건 및 필요한 경우 가격변동 방법
 - e)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및 재무능력

또한 입찰자는 수급사업자가 공동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어떠한 금지 조치의 적용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수급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다.

계약이 통지되면 수급사업자 승인 및 대금지불 조건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입찰서 제출 후 하도급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계약 상대방은 제1호에 언급된 정보를 포함하는 신고서를 발주당국에 제출하되 직접 제출 시에는 수령증,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인수증을 요구한다.

계약 상대방은 이 외 자기에게 발행된 계약서 단일사본, 또는 양도성 확인 증서를 제시하거나 채권 양도 또는 저당 설정의 수혜자 증명서 또는 저당해제 증명서를 제시함으로써 계약에 기인한 채권의 양도 및 저당 설정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후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특별증서로 수급사업자 승인 및 대금 지불 조건 승인을 확인한다.

특별증서에는 위의 제1호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된다.

3. 계약이 통지된 이후 계약 상대방이 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또는 특별증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과업 이행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은 본 법전 제106조에 명시된 단일사본 또는 양도성 확인증서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당 사본 또는 확인증서가 채권 양도 또는 저당 설정용으로 제출되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은 계약과 관련된 채권양도액 또는 저당설정액이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금액임을 증명하거나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당 금액이 축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계약에 기인한 채권의 양수인 또는 저당권자의 증명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단일사본 또는 양도성 확인증서가 수정되지 않거나 위에서 언급한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발주당국은 수급사업자 승인 및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불 조건 승인을 할 수 없다.

계약 상대방과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수급사업자 간 또는 여러 수급사업자 간의 과업 분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역시 단일사본 또는 양도성 확인증서를 수정하거나 경우에 따라 채권 양수인의 증명서 또는 저당해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 언급된 문서 수령일로부터 21일 간 발주당국의 결정이 없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승인 및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불 조건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직접지급 및 직접청구권)

- 프랑스의 경우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공공 발주 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하여 직불 요건을 달리 정의하고 있음.
- 「하도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 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조건을 승인한 경우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제도(Direct Payment)를 적용하고 있으며, 민간공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의 민간 발주자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권(Direct Action)을 시행할 수 있는 이분화된 제도를 운영 중임.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의 「하도급에 관한 법률」 및 「공공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공공 발주 사업인 경우 단일공사 기준 하도급공사 금액이 600유로 이상인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음.

하도급에 관한 법률 제75-1334호(1975년 12월 31일 제정, 2016년 7월 14일 개정)

(Loi n° 75-1334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ous-traitance)

제2장 직접 지급

제4조

이 법 제2장(직접 지급)은 2015년 7월 23일 제정된 조례 제2015-899(공공조달 및 계약)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6조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대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도 발주자의 동의를 얻은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수행한 부분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다.

다만, 이 장에 명시된 모든 계약에 대한 하도급계약 총액이 600유로 미만일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근거하여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의 명령(décret)에 의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법 제3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방부에 의해 체결되는 사업 계약의 경우에는 최고행정법원의 명령에 의해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원사업자의 청산 절차나 정리 절차(règlement judiciaire) 또는 소송에 따른 청구 일시 정지가 이루어지더라도 본 대금 지급의 의무는 존속된다.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맡은 계약 일부의 이행을 또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재하도급)하는 경

우, 제 14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그 재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보증이나 이전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7조

하도급 거래에 있어 직접 지급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8조

사업의 주요 계약자(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기준이 되는 증명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거나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반대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 기간이 지나면, 원사업자는 증명 서류의 통지서 혹은 분명하게 찬반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증명 서류의 일부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고지는 수령증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제9조

원사업자는 자신이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이미 담보로 제공된 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담보가액은 감액된다.

2016년 3월 27일 프랑스 관보 제0074호

공공계약에 관한 정령(법령 제2016-360호, 2016년 3월 25일 개정)

(Décret n° 2016-360 du 25 mars 2016 relatif aux marchés publics)

제4편 계약의 이행

제2장 하도급 관련 규정

제135조

제86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은 아래의 특별 규정과 함께 제114조에 언급된 수급사업자에게 적용된다.

1. 하도급 계약액이 600유로(세금 포함) 이상일 경우 발주당국에서 수급사업자로 인정하고 대금지불 조건도 승인한 수급사업자는 계약 내용 중 수급사업자가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발주한 산업계약, 특히 시제품의 제작, 생산, 조립, 시험, 특별수리, 조건부 보수계약 및 지적과업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액이 계약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만 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이 직접 지급된다.

2. 계약의 일부가 하도급된 경우 제110조에 규정된 선불금의 기초액은 제134조에서 언급된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위탁된 과업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축소된다.

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한다.

제110조에 명시된 한도액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된 과업금액으로 계약 또는 제134조 제2호에 명시된 특별증서에 규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수급사업자의 선불금 수령권은 발주당국이 계약 또는 특별증서를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발

생한다.

선불금 반납은 제111조에 명시된 방법에 의한다.

선불금을 수령한 계약 상대방이 계약이 통지된 이후에 계약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계약 상대방은 수급사업자가 선불금을 수령할 수 없거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도급할 과업 금액에 상응하는 선불금을 반납해야 한다.

계약 상대방이 반납할 선불금은 특별증서 통지 즉시 발주당국이 계약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36조

1. 수급사업자는 발주당국 명의로 작성된 지불청구서를 계약 상대방(원사업자)에게 전달하되 등기우편으로 전달 시에는 인수증, 직접 전달 시에는 수령증을 받도록 한다.

계약 상대방은 인수증 또는 수령증에 서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편으로는 수급사업자, 다른 한편으로는 발주당국 또는 발주당국이 계약에서 지정한 자에게 동의 또는 거부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수급사업자는 또한 발주당국 또는 발주당국이 계약에서 지정한 자에게 자신의 지불 청구서를 전달하되 계약 당사자가 지불 청구서를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수증이나 수령증, 또는 해당 우편물이 수취 거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우편통지서 및 계산서를 첨부하여 전달한다.

발주당국 또는 발주당국이 계약에서 지정한 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계산서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전달한다.

발주당국은 제98조에 명시된 기한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해당 기한은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발주당국이 계약 상대방의 전적 또는 부분적 동의를 득한 날로부터 계수하거나 해당 기한 내에 계약 상대방이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전혀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 문단에서 언급된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계수하거나 발주당국이 세 번째 문단에 언급된 우편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계수한다.

발주당국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계약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2. 수급사업자가 2014년 6월 26일 제정한 조례 2조에서 규정하는 결제대금지급 전자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 요청을 제기한 경우 계약 상대방은 결제대금지급 전자시스템을 통해 15일 이내에 지급 승인 또는 거절을 시행해야 한다.

제137조

발주당국의 승인을 득하고 대금 지불 조건도 승인된 수급사업자는 자기에게 직접 지급되는 대금의 한도 내에서 자기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각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서 사본 또는 제127조에 명시된 양도성 확인증서 사본 또는 경우에 따라 대금 직접 수령이 가능한 수급사업자를 지정하는 제134조의 특별증서 사본을 전달한다.

- 반면, 민간공사 및 600유로 미만의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수급사업자가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경과하도록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도급에 관한 법률 제75-1334호(1975년 12월 31일 제정, 2016년 7월 14일 개정)

(Loi n° 75-1334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ous-traitance)

제3장 직접청구권(직접소권)

제11조

이 법 제3장은 제2장(직접지급)에서 정한 공공계약 외 하도급과 관련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제12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 원사업자가 1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직접청구권의 포기는 무효로 한다.

직접청구권은 원사업자의 청산 절차나 정리 절차 또는 소송상 청구로 인한 일시적 중단의 경우에도 존속한다.

민법 제1799-1조 2항의 규정은 이 조항에 언급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

직접청구권은 하도급계약에 명시된 금부에 상당하는 대금 중 발주자가 실제 확인(기성 확인)된 부분에 대한 대금의 지급으로 한정된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최고서 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한도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3-1조

원사업자는 원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금채권 중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양도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의 대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 전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중층 하도급 허용

- 프랑스의 경우 앞서 제시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직접청구권 외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및 원사업자의 파산 절차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권리를 보존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또한 운영 중임.
-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기관이 날인해 발행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하도급에 관한 법률」 제14조).

- 보증서 교부가 없는 것 자체로 계약을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는 계약일자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나 불이행의 책임이 없으며, 추후 보증서를 지급받더라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등 강력한 의무 규정을 운영 중임.
- 이 외에도 보증서에는 발행기관이 하도급대금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보증서 형식이나 내용이 불완전한 때에도 무효로 인정하고 있음.

하도급에 관한 법률 제75-1334호(1975년 12월 31일 제정, 2016년 7월 14일 개정)

(Loi n° 75-1334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ous-traitance)

제3장 직접청구권(직접소권)

제14조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전액에 대해 이 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과 연대하여 보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하도급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이행한 급부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민법 제1275조에 따라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채권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잠정적으로 보증서는 담보에 관한 법률 제71-584호(1971년 7월 16일)의 적용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제14-1조

건설공사 및 공공계약 시 :

- 발주자는 제3조나 제6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의무의 대상이 아닌 수급사업자가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에게 그 의무를 다할 것을 독촉해야 한다.
- 동 규정은 공공계약 및 민간계약에 적용해야 하며, 최고행정법원의 명령이 정하는 조건 하에서 발주자가 대금 지급 조건을 동의하고 승인한 수급사업자가 지급 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을 요구해야 한다.

도급인에 관한 위 규정은 자신 및 자신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점유하는 개별 건물(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1항 전문은 수급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없더라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 하도급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1항 후문의 규정도 산업 하도급계약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이러한 계약 무효 조항은 수급사업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상대적 무효이며, 무효일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무효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져야 하기에 대금 체불 등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됨.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수급사업자에게 위임해야 하며, 이는 곧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와 같은 효과를 발휘함.
- 또한 이러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제도는 2차 이하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도 모든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함.⁷³⁾

3. 시사점

- 프랑스의 경우 타 EU 회원국과는 달리 하도급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의 「하도급법」과 유사한 「하도급에 관한 법률(LST)」을 통해 규제하고 있음.
-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에만 한정된 법률이어서 우리나라 「하도급법」이 전체 산업 내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건설업에 국한된 법률임을 알 수 있음.
- 프랑스의 「하도급에 관한 법률(LST)」은 하도급 거래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도급대금 지불 조항’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 등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제하고 있어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만 수급사업자 및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대부분의 건설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 법률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상당 부분 사인(私人)간의 계약으로 존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73) 프랑스의 경우 재하도급 및 재재하도급 등 중층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음. 단, 「하도급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적용(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2차 이하 하도급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재수급사업자의 경우 채권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1. 일본의 하도급 규제 개요

- 일본의 경우 하도급 거래의 규정은 1956년 6월 제정된 특별법인 「하도급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이하 하청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음.
- 동 법률은 우리나라의 「하도급법」과 같이 원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의 규제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의 의무와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대부분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연 방지 목적).
- 따라서 일본의 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과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서는 동법에 의거하여 원사업자가 법률에 따른 하도급 거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음.⁷⁴⁾
- 하지만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하청법」이 아닌 「건설업법(建設業法)」을 적용하고 있음.
- 이는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해 「하청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와 유사한 규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규제를 부과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임.
- 따라서 일본의 건설 하도급은 우리나라의 「하도급법」과는 달리 「하청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하청법」 제2조 제4항).
- 이에 일본은 건설 하도급 거래에 대해 1972년 법 개정 이후부터 「건설업법」 제3장 건설공사의 청부계약을 통해 건설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구체적인 건설 하도급 규제 사항으로는 다음 <표 VII-1>과 같이 일괄 하도급 금지 및 도급계약서 교부와 기타 6가지 원사업자 의무 사항을 규정함.⁷⁵⁾

74) 이효경(2011),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Ⅲ) - 일본, 한국법제연구원.

75) 이의섭(2012),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표 VII-1> 일본 「건설업법」상의 건설 하도급 관련 규정

구분	조항	내용
하도급 방식	일괄 하도급 금지(제22조)	• 도급받은 공사의 타인 일괄 하도급 금지
계약서 교부 의무	도급계약서 교부(제19조)	• 계약금액 등 13개 항목 도급계약서 명시 및 교부 의무화
발주자의 권한	하도급자 변경 청구(제23조)	•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사업자의 변경 청구 가능
원도급자 의무 사항	하도급자 의견 청취 (제24조의 2)	• 원사업자는 공법 등 결정 시 수급사업자의 의견 청취 필요
	하도급대금의 지불 의무 (제24조의 3)	• 원사업자는 공사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수령 시 1개월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검사 및 인도 의무 (제24조의 4)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완성 통지를 받을 경우 20일 이내에 검사를 시행하고 완성이 확인된 경우 공사물을 인도해야 함.
	특정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제24조의 5)	• 원사업자가 특정건설업자일 경우 하도급대금 신청을 받은 이후 50일 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특정건설업자의 하도급자 지도(제24조의 6)	• 원사업자가 특정건설업자일 경우 노동법 등의 준수에 대해 수급사업자 지원 의무
	특정건설업자의 시공체제대장 및 시공 체계도 작성 의무 (제24조의 7)	• 원사업자가 특정건설업자일 경우 수급사업자의 상호, 해당 수급사업자의 공사 내용 등을 기록한 시공체제대장과 시공체계도 현장 개시 의무

주 : 일본의 경우 건설업종마다 일반건설업 허가 또는 특정건설업 허가 중 한 가지를 취득해야 하며, 이 중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아 3,000만엔(건축일식공사의 경우는 4,500만엔) 이상을 하도급 계약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특정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함.

자료 : 이의섭(2012),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편, 일본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지불지연 방지 등 공정화를 꾀하고 국가 회계경리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인 「정부계약의 지불지연방지 등에 관한 법률(政府契約の支拂遅延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이하 지불지연방지법)」을 통해서도 공공공사의 하도급 거래와 관계된 규제를 운영하고 있음.
- 이는 공공계약(공공 발주 공사의 하도급계약 포함) 또한 민간계약과 같이 기본적으로

로 사법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계약자유 원칙이 우선되지만, 공공계약은 기본적으로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정한 계약 환경 유도를 위한 국가 발주 공사를 규율하는 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⁷⁶⁾

- 그 밖에도 일본은 법률의 무지에 의한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대등한 관계 구축 및 공정한 거래 실현을 꾀하기 위해 「건설업법 준수 가이드라인(建設業法令遵守ガイドライン)」을 지난 2007년 6월 국토교통성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건설업법 준수 가이드라인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에 관한 유의사항

1. 견적 조건의 제시(건설업법 제20조 제3항)

[건설업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행위 사례]

- ① 원사업자가 불명확한 공사 내용의 제시 등 애매한 견적 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견적을 행하게 한 경우
-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공사 내용 등의 견적 조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원사업자가 대답 또는 애매한 답변을 한 경우

[건설업법에 위반되는 행위 사례]

- ① 원사업자가 예정가격 700만엔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견적 기간을 3일로 수급사업자에게 견적을 행하게 한 경우

2. 서면에 의한 계약 체결

2-1. 당초 계약(건설업법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19조의 3)

[건설업법에 위반되는 행위 사례]

- ① 하도급공사에 관해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② 하도급공사에 관해 건설업법 제19조 제1항의 필요 기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서면을 교부한 경우
- ③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서면 도급계약 체결 이전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의 시공 도중 또는 준공 후 계약 서면을 교부한 경우

2-2. 추가 공사 등으로 인한 추가·변경 계약(건설업법 제19조 제2항, 제19조의 3)

[건설업법에 위반되는 행위 사례]

76) 이효경(2011), 전계서.

- ①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이하 추가공사)가 발생하였음에도 원사업자가 서면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② 하도급공사에 따른 추가공사 등에 대하여 착공 이후 또는 준공 후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 ③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 등의 시공을 지시한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계약 변경 절차가 미완료임을 이유로 하청 계약의 변경에 응하지 않는 경우
- ④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공사 기간이 당초 계약에 따른 공사 기간보다 짧아 남은 공사 기간 내 공사를 완료시키기 위해 인력 투입 증원 등이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와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사정에 따라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2-3. 공사기간 변경에 의한 변경 계약(건설업법 제19조 제2항, 제19조의 3)

[건설업법에 위반되는 행위 사례]

- 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공사비용이 증가하였지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서면 변경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3.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건설업법 제19조의 3)

[건설업법에 위반되는 행위 사례]

- ① 원사업자의 예산 계획만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견적액을 크게 밑도는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②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거래에서 불리한 취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시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기존 거래 가격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증액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시킨 경우
- ④ 원사업자가 계약 후 동의한 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경우

4. 가격지정 발주(일방적 하도급대금 결정)(건설업법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19조의 3, 제20조의 제3항)

[건설업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행위 사례]

- ① 원사업자가 자신의 예산 계획만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의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원사업자가 합리적 근거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 의한 견적액을 현저하게 감액하여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그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출된 견적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의 금액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업법에 위반되는 행위 사례]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도급 대금이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수하고 공사의 시공 도중 또는 준공 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에 응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의 금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견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지 않고 스스로의 예산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하도급계약 체결의 판단을 그 자리에서 실시하고 그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5. 부당한 자재 등의 구입 강제(건설업법 제19조의 4)

[건설업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행위 사례]

- 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대여 업체를 지정한 결과 수급사업자는 예정 구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재 등을 구매·대여하게 된 경우
- ②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사업자가 지정한 자재 등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이미 구입한 자재 등을 반환하도록 해 금전 및 신용 면에서 손해를 입혀 종래부터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던 자재납품업자와(대리점)의 거래 관계가 악화된 경우

6. 제공사(건설업법 제18조, 제19조 제2항, 제19조의 3)

[건설업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행위 사례]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명확히 협의하지 않은 채 제공사를 수급사업자가 수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7. 비용 부담 전가(건설업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 3, 제20조 제3항)

[건설업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행위 사례]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하도급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 비용이나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은행 계좌로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켜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② 원사업자가 건설 폐기물의 발생이 없는 하도급공사에서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 명목으로 일정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③ 원사업자의 판매 촉진 명목의 협력 비용 등 공제 근거가 불명확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④ 원사업자가 공사를 위해 자신이 확보한 주차장을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로 실제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 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제공사를 다른 전문공사 업체를 통해 수행하고 그 비용을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8. 공사 기간(건설업법 제19조 제2항, 제19조의 3)

[건설업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행위 사례]

- ① 원사업자의 시공관리 불충분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공사의 공정에 지연이 생겨 그 결과 수급사업자의 돌관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증가 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② 원사업자의 시공관리 불충분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공사의 공정에 지연이 생기고 준공일이 늦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원사업자 스스로 노무자를 준비하고(직접 시공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③ 원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하도급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공사 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동안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중장비 등을 건설현장에 대기시키거나 기술자 등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9. 지불 보류(건설업법 제24조의 3, 제24조의 5)

[건설업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행위 사례]

- ①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목적물이 완성되어 원사업자의 검사 및 인도 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장기간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② 건설공사의 선행 공정인 기초공사, 토공사, 철근공사 등에 대해 각각의 공사가 완료되어 원사업자의 검사 및 인도를 종료했지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전체의 종료 기간까지 장기간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 ③ 공사 전체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다른 공사 현장까지 유보금을 이월한 경우

10. 장기 어음(건설업법 제24조의 5 제3항)

[건설업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행위 사례]

- ① 특정건설업체인 원사업자가 어음 기간 120일을 초과한 계산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11. 장부의 비치 및 보존(건설업법 제40조의 3)

[건설업법에 위반되는 행위 사례]

- 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장부 및 붙임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 ② 장부 및 붙임 서류는 구비되어 있지만 5년 간 보존되지 않은 경우
- ③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완성도 등 영업에 관한 서류가 10년 간 보존되지 않은 경우

- 「건설업법 준수 가이드라인」에서는 건설 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한 인정 기준 또한 10개 항목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유도하고 있음.

건설업법 준수 가이드 라인 : 건설 하도급 거래에 관한 불공정한 거래 방법의 인정기준

1. 수급사업자로부터 도급한 건설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 20일 이내에 그 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완료하지 않는 행위
2. 앞 1항의 검사에 의해 건설공사의 완성을 확인한 후, 수급사업자가 신청했을 경우에 하도급계약에 대해 정해진 공사 완성의 시기부터 20일을 경과한 날 이전에 인도를 받는 취지의 특약이 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 인도를 받지 않는 행위
3.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을 지급 받았을 때 해당 지불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시공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원사업자가 지불 받은 금액 기준 기성고 부분에 대한 비율 및 해당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기성고 부분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기산해 1개월 이내에 지불하지 않는 행위
4. 특정건설업자가 하도급한 계약(하도급계약의 수급사업자가 특정건설업자나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의 법인인 경우 제외, 5항 항목도 동일)에 있어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항의 신청일(특약이 되어 있는 경우 그 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5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는 행위

5. 특정건설업자가 하도급한 계약의 하도급대금 지불에 대해 2항의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50일 이내에 일반 금융기관(예금 또는 저금의 수용 및 자금의 융통을 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할인이 불가능한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활용하여 하도급 발주 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가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도급액으로 정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7. 하도급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하도급계약 체결 후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활용하여 하도급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장비 또는 이러한 구입처를 지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구매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9. 하도급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원도급자로부터 구입시켰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자재를 이용한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보다 빠른 시기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의 액수로부터 해당 자재의 대가 전부 혹은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해당 자재의 대가 전부 혹은 일부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10. 원사업자가 1~9항에서 언급한 행위를 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대신, 중소기업청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알린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해 거래의 양을 줄이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등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음은 「건설업법」 및 「지불지연방지법」,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업법 준수 가이드라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건설 하도급 규제에 관한 주요 사항임.

2. 일본의 하도급 규제 현황

(1) 공공공사 일괄 하도급 금지⁷⁷⁾

- ‘일괄 하도급’이란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가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하도급을 통하여 그 공사의 전부를 맡기는 것으로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건설업법」 및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⁷⁸⁾, 「건설공사 표준하도

77) 최민수·최은정(2015), 일본 건설업 허가 및 시공체제 제도 현황과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요 인용.

78) 일본의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업법」의 개정에서 단계적으로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또한 건설 하도급과 관련된 규제 사항을 운영하고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사유를 살펴보면, 원·하도급 관련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공공 발주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그 담당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기 때문임. 즉, 개정된 「건설업법」에서는 건설업자나 단체에게 담당자(전문건설업체 및 기능자)의 확보 및 육성이 책무로

급계약 약관」을 통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⁷⁹⁾

-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일괄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시공체제의 적정화

제12조(일괄 하도급의 금지)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다만,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않고 「건설업법」만 적용받는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으면 일괄 하도급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 약관(표준하도급계약서)⁸⁰⁾

제6조(일괄 위임 또는 일괄 하도급의 금지)

수급사업자는 일괄적으로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공공공사 및 공동주택 신축 공사 이외의 공사에서 미리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서면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와 같은 일괄 하도급 금지 규정으로 인해 이를 위반한(공공공사 및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괄 하도급을 시행한 민간공사)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서 새롭게 규정되고, 국토교통성은 그것을 지원하는 책무가 추가되었으며, 특히 담당자의 확보·육성 방안 중에 ‘기능 노동자 등에 대한 적절한 임금 지불이나 사회보험의 철저한 가입 등 취업 환경의 정비’, ‘하도급 계약에서 도급대금의 적절한 설정이나 적절한 대금의 지불 등 원·하도급 거래 적정화’ 등의 업무가 새롭게 공공 발주기관에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79) 이 외에도 ‘일괄하도급의 금지(1992년 12월 17일 건설성경건발 제379호)’를 통해서도 일괄 하도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80) 일본의 경우 1977년 4월 26일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 약관(建設工事標準下請契約約款)〕를 보급·활용하고 있으며, 개별 계약의 적용에 있어 건설공사의 종류, 규모 등 계약 관행 또는 시공 실태를 종합 고려하여 필요 시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하고 있음.

이루어지며, 영업정지의 대상은 하도급공사를 발주한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 또한 영업정지가 이루어지는 등 강력한 감독 처분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하도급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⁸¹⁾를 인정받으려면 원사업자의 기술자가 하도급공사의 ① 시공계획 작성, ② 공정관리, ③ 품질관리, ④ 완성 검사, ⑤ 안전관리, ⑥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⑦ 발주자와의 협의, ⑧ 주민에 대한 설명, ⑨ 대관 신고, ⑩ 인근 공사와의 조정 등에 대하여 주체적인 역할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해야 함.

- 이러한 일괄 하도급 금지 규정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도급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회사가 자회사에 하도급공사를 위임하는 데 있어 별도 법인인 경우 실질적 참여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일괄 하도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함.

(2) 하도급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및 표준하도급계약 약관 활용 권고⁸²⁾

- 일본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하도급대금, 시공 범위 등에 관련된 원·하도급 사이의 계약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명시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도급공사 착공 전까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상호 교부해야 하는 ‘하도급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건설업법」 제19조).
- 이때 계약서에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다음의 13개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계약서 작성을 방지하는 한편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음.
- 또한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 약관(建設工事標準下請契約約款) 활용을 권장하고 있음.

81) ‘실질적인 참여’는 원사업자 스스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 지도(시공 계획의 종합적인 기획, 공사 전체의 정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공사 목적물 공사·가설물 공사·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수급사업자간 시공의 조정,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도 및 감독 등) 모든 면에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수급사업자가 제하도급할 경우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 스스로 다시 하도급한 전문 작업 항목 부분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 지도하는 것을 의미함.

82) 최민수·최은정(2015), 전거서, 주요 인용.

건설업법에 따른 하도급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13개 항목)

1. 공사 내용
2. 도급대금의 금액
3. 공사 착수 시점 및 공사 완공 시기
4. 선금금 또는 기성고에 따른 임금 지급 시기 및 방법
5.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사 기간 변경, 도급 대금 변경 또는 손해 부담 및 금액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기간의 변경 또는 손해 부담 및 그 금액의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7. 가격 등의 변화 혹은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액 또는 공사 내용의 변경
8. 공사에 의해 제3자가 손해를 받았을 경우 배상금 부담에 관한 규정
9. 주문자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를 제공하거나 또는 건설기계나 기타 기계를 대여할 때 그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
10. 주문자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시기 및 방법, 인도 시기
11. 공사 완공 후 하도급대금의 지불 시기 및 방법
12. 각 당사자의 이행, 지체, 기타 채무 불이행의 경우 지연 이자, 위약금, 기타 배상금
13.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

(3)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

- 일본의 경우도 하도급대금의 적정한 지급을 통한 수급사업자 경영 안정 및 부실 공사 방지 등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업법」 및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합리화지침(建設産業における生産システム合理化指針)」, 「건설업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불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건설업법 내 하도급대금 지불 규정

제23조의 3

원사업자는 도급 대금의 기성 부분에 대한 지급 또는 공사 완성 후에 있어서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당해 지급의 대상이 된 건설공사를 시공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당해 원사업자가 지급을 받은 금액의 기성고에 대한 비율 및 당해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기성고 부분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을 당해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에 또한 가능한 단기간 내에 지급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선금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재의 구입, 노동자의 모집, 기타 건설공사의 착수에 필요한 비용을 선금금으로 지급하도록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 5

특정건설업자가 발주한 하도급계약에서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은 공사 목적물의 인도,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50일을 경과하는 날 이전으로, 또한 가능한 단기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당해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정건설업자는 당해 특정건설업자가 원사업자인 하도급계약에 관련된 하도급대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지급 기일 또는 제2항의 지급 기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당해 특정건설업자가 그 지급을 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특정건설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전조 제2항의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5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당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관해 그 일수에 따라 당해 미지급금액에 건설성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연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은 경우 그 지불 대상이 된 공사를 시공한 수급사업자에게 1개월(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지불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음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도 어음 기간은 최대 120일 이내로 설정하도록 규정함.⁸³⁾
- 선급금에 대해서도 동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자재 구입, 노무자 모집, 기타 건설공사 착수에 필요한 비용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단,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특정건설업자⁸⁴⁾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대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특정건설업자 또는 자본금액 4,000만엔 이상의 법인인 경우 제외)로부터 인도 신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준공금의 경우 1개월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⁵⁾

83)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가능한 한 현금 지불로 해야 하고, 현금 지불과 어음 지불을 병용하는 경우라도 지불대금의 현금 비율을 높이고 노무비 상당분은 현금 지불로 해야 함. 어음 기간이 120일이 넘을 경우 할인 곤란한 어음에 해당할 수 있어 어음 기간은 1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84) 일본 건설업의 경우 28개의 업종(2개의 일식공사와 26개의 전문공사)마다 일반건설업 허가 또는 특정건설업 허가 중 한 가지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특정건설업 허가 대상은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아 3,000만엔(건축일식공사의 경우는 4,500만엔) 이상을 하도급 계약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의미함. 따라서 일반건설업 혹은 특정건설업의 판단 기준은 도급금액에는 한계가 없으며, 하도급을 발주하는 액수에 의하여 구분됨, 최민수·최은정(2015), 전거서.

- 이 외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을 목적으로 하도급공사에 대한 완공 검사를 임의로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완공 검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 완공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시행해야 하고, 검사 후 수급사업자가 인도를 요청할 때에는 즉시 공사 목적물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음.⁸⁵⁾
- 일본의 경우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이 「건설업법」,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합리화지침」, 「건설업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표 VII-2> 참조).

<표 VII-2> 일본 건설 하도급대금 지불 기준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및 관련 법·지침
현금 지급 권고	주요 내용	• 하도급대금 지불 시 현금 지불을 권장함.
	관련 법령	•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합리화지침」 제4(2) 대금 지불 등의 적정화
선금금 지급 권고	주요 내용	• 선금금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재의 구입, 노동자의 모집 및 그 외 건설공사의 착수에 필요한 비용을 선금금으로 지불하도록 배려함.
	관련 법령	• 「건설업법」 제24조의 3,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합리화지침」 제4(2) 대금 지불 등의 적정화
사급자재 대금 회수 시기	주요 내용	•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발주자(또는 원사업자)가 유상 지급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재 대금 지불 기일 전에 수급사업자의 지불 요구를 금지함.
	관련 법령	•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합리화지침」 제4(2) 대금 지불 등의 적정화, 「건설업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인정기준」 9. 조기 결제에 대해
검사 및 인도 시기	주요 내용	• 하도급공사의 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공사의 완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검사 후 수급사업자가 인도를 신청한 경우 즉시 공사 목적물의 인도를 받아야 함.

85) 특정건설업자는 원도급으로서의 의무와 특정건설업자로서의 의무 모두를 갖고 있기에,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 지불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혹은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인도 신청일로부터 50일 이내의 지불 기일(계약서상 지불기일 규정이 없으면 인도 신청일 기준) 중 빠른 일자가 실제 지불일이 됨.

86) 수급사업자의 ‘공사 완성 통지’나 ‘인도 요구’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서면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업법」 제24조의 4, 「건설업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인정기준」 1. 검사 기간에 대해 및 2. 공사 목적물의 인수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자로부터 도급 대금의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는 그 지불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시공한 수급사업자에게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함.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업법」 제24조의 3, 「건설업법」 준수 가이드라인」 9. 지불 유보, 「건설업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인정기준」 3. 발주자로부터 도급 대금을 지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불에 대해
특정건설업자와 관련된 하도급대금의 지불기일 특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건설업자는 수급사업자(특정건설업자 또는 자본금 액수가 4,000만엔 이상의 법인 제외)로부터 인도 신청일 이후 기산하여 5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업법」 제24조의 5, 「건설업법」 준수 가이드라인」 9. 지불유보, 「건설업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인정기준」 4. 특정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지불에 대해
할인이 곤란한 어음 지불 금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건설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지불을 일반 금융기관에서 할인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음으로 지급할 수 없음.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업법」 제24조의 5 제3항, 「건설업법」 준수 가이드라인」 10. 장기 어음,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합리화지침」 제4(2) 대금 지불 등의 적정화, 「건설업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인정기준」 5. 교부 어음의 제한에 대해
반품 전표의 처리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품 전표(기 발생 전표의 취소 또는 조정)를 시행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쌍방의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함과 동시에 원사업자는 그 내용이나 차감액의 산정 근거 등에 대해 견적 조건이나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업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 3, 제20조 제3항, 「건설업법」 준수 가이드라인」 7. 반품 전표 처리

주 : 국토교통성 간사이 지방정비국, 適正な下請契約に向けて, 2004, 재정리.

(4) 시공체제대장 작성(하도급 정보 제공), 중층 하도급 허용

- 일본의 ‘시공체제대장’은 하도급, 재하도급 등 공사 시공을 맡은 모든 업체명, 각 시행 범위, 각 기술자 성명 등을 기재한 기록을 뜻함.

- 시공체제대장은 현장 시공체계(시공체제)를 파악함으로써 ① 품질·공정·안전 등 시공상의 트러블 발생, ② 불량 부적격 업체의 시공 참가, 「건설업법」 위반, 안이한 중층 하도급에 따른 생산 효율의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 이에 따라 하도급을 통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특정건설업자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수행을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총액이 3,000만엔(건축일식공사는 4,500만엔) 이상일 경우 시공체제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함.⁸⁷⁾
 - 시공체제대장은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를 불문하고 작성해야 하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공사 현장마다 갖추어야 함.
 - 또한,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공사의 경우 시공체제대장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함.
- 시공체제대장의 작성 순서는 기본적으로 원사업자인 특정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1차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체제대장 작성을 통지함과 동시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그 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게시하고 시공체제대장 및 시행 체계도를 정비해야 함.
 - 2차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차 수급사업자는 특정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통지서⁸⁸⁾(계약서 사본 붙임 포함)를 제출하는 동시에 2차 재수급사업자에게 시공체제대장 작성 공사임을 통지해야 함.
 - 만약 3차 하도급(재재하도급)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2차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인 특정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통지서를 제출(1차 수급사업자를 경유하여 제출 가능)함과 동시에 3차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체제대장 작성 공사라는 점을 통지해야 함.
 - 이후 특정건설업자는 2~3차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재하도급 통지서 또는 스스로 판단한 정보를 기준으로 시공체제대장 및 시행 체계도를 정비하도록 규정함.

87) 기존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공체제대장 제출 공사 기준을 하도급 계약 총액 3,000만엔(건축일식공사 4,500만엔)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우에는 유지보수 등 소규모 공사의 증가에 따라 이러한 소규모 공사에도 시공 체제를 파악하여 부실 공사나 일괄 하도급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있음.

88) 시공체제대장의 작성이 의무화된 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그 공사를 다시 재하도급한 경우 원사업자인 특정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재하도급 통지서의 내용은 ① 자사(수급사업자)에 관한 사항, ② 자사가 원사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③ 자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재수급사업자에 관한 사항, ④ 자사가 재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등임.

- 이와 같이 시공체제대장에 기재하는 수급사업자의 범위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의 모든 수급사업자(무허가 업체 포함)이므로 1차 하도급뿐만 아니라 2~3차 하도급 등도 기재 대상임.⁸⁹⁾

하도급 장부의 기재사항

1. 영업소의 대표자 이름과 그 취임일
2. 주문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명칭, 공사 현장 소재지, 주문자와 계약일, 주문자 상호, 주소, 허가번호, 주문자로부터 받은 준공검사의 연월일, 공사 목적물을 주문자에게 인계한 연월일)
3.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⁹⁰⁾(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건설공사의 명칭, 공사 현장의 소재지, 하도급 계약일, 수급사업자 상호, 주소, 허가번호, 하도급공사의 완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사가 실시한 검사'의 연월일, 하도급공사의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업체로부터 인도받은 연월일)

하도급 장부의 붙임 서류

1. 계약서 또는 그 사본(전자 기록 가능)
2. 특정건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문자(원도급공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로서 일반건설업자(자본금 4,000만엔 이상의 법인 기업 제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불이 끝난 금액, 지불한 연월일 및 지불 수단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나 그 사본
3. 특정건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문자(원도급 공사에 한한다)이며, 3,000만엔(건축일식공사의 경우 4,500만엔, 1차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총액에서 판단) 이상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현장에 비치한 시행체제대장에서 다음에 제시한 내용을 서류로 첨부해야 함
 - 해당 공사에 관하여 실제로 공사 현장에 비치한 감리기술자의 이름, 보유하고 있는 감리기술자 자격
 - 수급사업자(말단까지 전 업체를 뜻한다. 이하 동일)의 상호, 허가 번호
 - 수급사업자에게 위임한 건설공사의 내용, 공기
 -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공사 현장에 배치한 주임기술자의 이름, 보유 기술 자격
 - 수급사업자가 주임기술자 이외에 전문 기술자를 배치한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 그 자가 관리를 담당한 건설공사의 내용, 보유 기술 자격

89)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자재 납품 및 조사 업무, 운반 업무 등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상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지방서 등에 의해 발주자가 기재를 요구할 때에는 기재하는 경우도 있음.

90) 특정건설업자가 주문자(원도급공사에 국한되지 않음)로서 일반건설업자(자본금이 4,000만엔 이상인 법인 제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도 기재가 필요하다.

- ① 지불한 하도급대금의 금액, 지불한 연월일 및 지불 수단
- ② 지불 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그 어음의 금액, 교부 연월일, 어음 만기
- ③ 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때는 그 후의 하도급대금의 지불 잔액
- ④ 지연 이자액 지급일(수급사업자로부터 인도 신청일 기준 50일 경과시 발생하는 지연이자(연 14.6%)의 지불에 관한 것)

- 이 외에도 「건설업법」에서는 도급계약의 내용을 정리한 장부를 각 영업소마다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장부는 5년 간 보존 의무가 있음), 장부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기 때문에 ‘하도급 장부’로 볼 수 있음.
-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시공체제대장은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공사대장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제도의 도입 취지 및 등록 자료의 범위, 등록 의무화 대상 업체 등에서 차이가 존재함.
-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공사대장 등록은 사실상 공사 실적을 등록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본의 시공체제대장은 공사 실적과 더불어 2~3단계 재수급사업자까지 시공체제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임.

(5) 하도급 채권보전 지원사업⁹¹⁾

- 국토교통성에서는 하도급 건설기업의 원도급 채권 지불보증을 국가가 지원하는 ‘하도급 채권보전 지원사업’을 201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는 수급사업자의 자금조달을 한층 원활히 하는 등 경영 환경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도로 활용되고 있음.
- ‘하도급 채권보전 지원사업’의 특징은 피보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보증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한다는 점임.
- 국가의 지원은 보증료율의 2/3(연율 3% 상한)이며, 별도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연율 1%의 이용료를 필요로 함.
- 또한 채권 매입 회사의 리스크를 경감하는 손실 보상을 실시하여 하도급 건설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만약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채권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보증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 보호 측면에서 원사업자에게 별도 통보하지는 않음(단, 보증의 이행 단계에서는 알려질 수 있음).

91) 이청훈(2015), [일본정책연구] 2014·2015년도 추진 중소기업 시책, 백서공방 ; 김성일 외(2015), 전계서 ; 건설경제, “하도급 채권보전 지원사업 이용 급증”, 2011.4.22일자 기사 인용 및 재구성.

3. 시사점

-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일본의 「하청법」은 우리나라 「하도급법」과 유사하게 별도 법률을 통해 하도급 관계를 규제하고 있으나, 하도급대금의 지연을 방지하는 한정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하도급법」이 전체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것과는 제정 목적이 상이함.
- 또한 법률의 적용 범위도 건설산업 특수성에 대한 고려 및 여러 법률을 통한 중복 규제 방지를 고려하여 건설업은 「하청법」 적용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우리와는 상이함.
- 일본의 경우, 건설 하도급에 대해서는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 「건설업법」⁹²⁾을 적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공공 계약의 특성에 따른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불지연방지법」 및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공공사 하도급 거래를 규율하고 있음.
- 하지만 그 규제의 내용은 ‘일괄 하도급 금지’, ‘하도급 내용의 발주자 통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계약 서면 교부 의무화’, ‘하도급 계약 자료의 공개’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그 규제의 내용이 제한적임.
- 반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법 준수 가이드라인」에 구체적 사례 등을 담아 제작·배포함으로써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가 사후적인 분쟁 해결 및 강력한 처벌을 통한 공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일본의 경우 원사업자에 의한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하도급 채권보전 지원사업’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92) 국토교통성의 「건설업법」 하위 지침이라 할 수 있는 「건설업 법령 준수 가이드라인」 포함.

위한 지원책 성격의 제도 등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다 산업 구조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외국의 건설 하도급 규제와 국내와의 비교

- 지금까지 분석한 선진국(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의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을 주요 규제 사항을 중심으로 종합 비교하면, 다음의 <표 VIII-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표 VIII-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설 하도급에 대해 다양한 의무화 규정들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중층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각 국가의 산업 특성에 적합한 최소한의 시장질서 유지 측면의 규제만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건설 하도급 관련 법률 또한 조사한 선진국 모두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건설 관련 법령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는 반면, 유독 우리나라만 전 산업에 공통 적용하는 기업 간 규제 거래인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중복 규제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 규제 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공공성 확보 목적에 따른 공공 발주 사업만을 규제하고 있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건설 하도급 거래를 폭넓게 규제하고 있는 우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이 중 우리나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 하도급 규제 사항과 선진국의 하도급 규제 사항과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① 일괄 하도급 금지 규정과 직접시공 의무 규정, ② 재하도급 금지 및 동종 업종간 하도급 금지, ③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④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준수, ⑤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의무화, ⑥ 정벌적 손해배상, ⑦ 표준 하도급계약서 활용 등을 들 수 있음.

<표 Ⅷ-1> 각 국가별 주요 하도급 규제 사항 종합 비교

주요 규제	우리나라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직접시공 의무제	○	○	○	×	×	×	△	×	×	×	×	×	×	×
일괄 하도급 금지	○	○	○	×	○	×	○	×	△ ^{주3)}	×	△ ^{주3)}	×	○	△ ^{주4)}
동종 업종간 하도급 제한	○	○	×	×	×	×	×	×	×	×	×	×	×	×
재하도급 금지	○	○	×	×	×	×	×	×	×	×	×	×	×	×
하도급 내용 (발주자) 통보	○	○	○	×	○	×	○	×	○	×	○	○	○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	×	△	×	×	×	×	×	×	×	×	×	△	△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준수	○	○	○	○	○	○	○	△ ^{주3)}	○	○	○	○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	○	○	×	×	×	×	×	×	×	○	○	○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주1)}	○	×	×	×	○	×	△	×	△ ^{주3)}	×	○	○	×	×
하도급 대금 동일 조정 ^{주2)}	○	○	×	×	×	×	×	×	×	×	×	×	×	×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의무화	○	○	×	×	×	×	×	×	×	×	×	×	×	×
하도급계약 서면 계약 의무화	○	○	○	○	○	○	○	×	○	○	○	○	○	○
하도급공사 계약 자료의 공개	○	×	○	×	○	×	○	×	×	×	×	×	○	○
징벌적 손해배상	○	○	○	○	×	×	×	×	○	○	×	×	×	×
정부 표준 하도급계약서 활용	권고	권고	×	×	×	×	×	×	×	×	×	×	권고	권고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	×	×	×	×	×	×	×	○	×	○	×	×	×

주 : ○ - 의무사항, △ - 제한적 의무사항, × - 의무사항 아님.

- 1)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채납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적용 여부
- 2) 원사업자의 공사금액 조정 시 동일 내용 및 비율로 대금 조정 의무화
- 3) 회원국의 개별법에서 관련 규제를 금지·시행하는 법률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EU 지침에 영향을 받기에 △로 표기
- 4) 민간공사 또한 일괄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으나,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는 경우 일괄 하도급 가능(제한적)

(1) 일괄 하도급 금지 및 직접시공 의무 규정

-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 하도급할 수 없으며, 동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일괄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음.
- 반면, 조사한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공공공사만 일괄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⁹³⁾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가에서 일괄 하도급을 제한하지 않음.
 - 이는 원사업자의 자율성과 시공 효율성을 존중하고 사인간 계약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임.
 - 다만,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공공공사에 한해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일괄 하도급 금지’ 규정을 강력히 규정하고 있는 일본 또한 민간사업의 경우에도 발주자의 허락을 득한 경우에는 일괄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 공공 및 민간 공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일괄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나,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감독 처분이 이루어져 원사업자만을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규제의 형평성 및 제도 운용의 실효성 또한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직접시공 의무 규정 역시 미국과 독일에서만 공공사업에 한해 해당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도급공사가 적은 독일 건설산업의 특성을 종합 고려할 경우 미국에서만 해당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 가능함(<표 VIII-2> 참조).⁹⁴⁾
 -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따라

93) 영국 및 프랑스의 경우 해당국의 관련 법령에는 공공공사 시 일괄 하도급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EU지침이 개별 국내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금지 규정으로 판단함.

94) EU 또한 공공사업에 한하여 일정 비율 이상 원사업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였으나, 최근 해당 지침이 폐지되었음.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만 도급금액 기준 10~50%⁹⁵⁾의 비율만큼 원사업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나⁹⁶⁾, 미국의 경우는 모두 공사 규모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최소 의무비율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법 기준 도급금액의 12%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와는 차이를 보임.

<표 VIII-2> 각 국가별 원사업자의 직접시공 의무 현황

국가	한국	미국	독일
대상 공사	공공 및 민간 공사	공공공사	공공공사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 도급 금액의 10~50% 원사업자 직접시공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금액 기준 최소 12% 이상 원사업자 직접시공 의무화 (연방정부 발주 공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시공 원칙
예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공사 등 별도의 전문적 영역의 경우 직접시공 의무비율 계상시 제외 가능 (하도급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의 서면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핵심 공종이 아닌 부대 공종인 경우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R 36.5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OB/B 제4조 제8항

주 : 상기 국가 외 EU 및 영국, 프랑스, 일본의 경우 원사업자의 직접시공을 법률로 의무화하지 않음.

- 따라서 해외의 사례로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일괄 하도급 금지’ 규정은 원사업자의 자율성과 시공 효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규제로서,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 고 려하여 예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직접시공 의무’ 규정 또한 공사 규모로 일원화하여 제한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적용 범위와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종합적 재논의가 필요함.

95)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 3억원 이상 10 원 미만인 경우 3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20%,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로 공사 규모가 커질수록 직접시공 비율이 감소함(「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96) 동법 시행령에서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서면으로 승낙한 경 우거나,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해당 특허 및 신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예외임.

- 우리나라 직접시공의무제는 해외와 달리 무자격 부실 업체의 난립과 입찰 브로커화 방지⁹⁷⁾와 더불어 건설근로자의 임금, 자재 및 장비 대금 체불 등의 방지가 주 이유⁹⁸⁾였기에 타 규제(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노무비 구분관리제 등)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며, 해외 경쟁력 확보 및 산업 육성 측면에서 종합 검토가 필요함.

(2) 재하도급 금지 및 동종 업종간 하도급 금지 규정

- ‘재하도급 금지’ 규정의 경우, 우리나라는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 해당 의무를 지도록 강제화하고 있으나, 조사한 해외 선진 6개국 모두 해당 사항을 규제하고 있지 않았음.
- 더구나 ‘재하도급 금지’ 규정의 경우 조사 국가 모두 중층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타 규제의 적용 범위 또한 2차 이하 수급사업자에게도 대부분 적용되고 있음. 결국 이들 국가는 중층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설 생산체계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선진국 조사 결과 모든 국가에서 ‘재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한 맹목적인 제도 도입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제도 설계·시행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우리나라가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재하도급이 꼬리를 물면서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거나 실공사비가 누수되면서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임.⁹⁹⁾
- 즉, 재하도급을 허용할 경우 직접시공 역량이 없는 전문건설업체의 난립이 우려되며, 실제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공기 지연 및 하자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우리나라 건설 생산체계의 특성을 종합 고려할 경우 이는 과도한 원사업자의 부담과 산업 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음.

97)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4.3.17.

98) 전라일보 신문기사, 건설계 “하도급 규제 지나쳐… 완화돼야”, 2016.6.27.

99) 최민수, 건설경제 기고문, 다단계 재하도급은 시대착오, 2010.4.21.

- 따라서 페이퍼컴퍼니 퇴출 목적의 전문건설업 등록 요건 조정 등 관련 연관 제도와 함께 재하도급 금지 규정 또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동종 업종간 하도급 금지’ 규정 또한 ‘재하도급 금지’처럼 선진국에는 없는 국내 특유의 제도임.
- 동종 업종간 하도급 금지 규정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시장의 니즈가 아닌 제도로써 구분한 우리나라 특유의 업역 구분으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해외 조사 국가 모두 엄격한 업종 구분에 기준한 원·하도급 자격에 대한 법·제도적 제한이 없거나 우리처럼 경직되어 있지 않음. 이는 그들이 원사업자의 자율성 및 시공 효율성에 기인한 최적의 건설 생산체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종 업종간 하도급 금지 또한 건설 업역 체계 개선 등과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독자적 제도 변경은 여러 문제점을 수반할 것으로 판단됨.¹⁰⁰⁾

(3)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를 통해 공공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경우 수급사업인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만의 제도로써 조사 국가의 경우 미국,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체결한 사인간의 계약을 과다하게 침해할 수 있기에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음.
- 미국의 경우 FAR 규정을 통해 연방조달 사업시 1,250만 달러 미만이거나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의 경우 발주자의 계약 담당 공무원이 가격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사업자의 사전 검토 여부 및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상 내용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격 책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와 같은 일률적인 심사제도로 볼 수 없음.¹⁰¹⁾

100) 건설 하도급제도와 건설공사 발주제도는 상호 연관된 제도로써, 하나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시 오히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역할, 견제제한 폐지 효과, 향후 건설시장 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임., 김재영(2010), 건설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부 인용.

101) 우리나라의 경우 하도급 계약 금액이 원사업자가 수주한 금액의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의

- 일본의 경우 「건설업법」 제19조의 3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견적액을 크게 밀도는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심사 대상 공사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주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 실정임.
-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해 보았을 때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기준의 획일적 적용에서 벗어나 일정 공사 규모 이하의 사업만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의 제기시 선택적으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시행하는 등 탄력적인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준수¹⁰²⁾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준수’ 규정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조사 국가 모두 이를 법률로 규제하고 있음.
- 이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대금지급 관련 사항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가장 분쟁의 여지가 높고, 불공정 행위 중 수급사업자를 보호해야 하는 핵심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해당 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 및 기성·준공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자로부터 관련 대금 지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일률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고 있어 대형공사일수록 원사업자의 낙찰률이 낮은 우리나라 공공 입·낙찰제의 현실을 감안하여 대형공사인 경우 대부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과도한 관리비용 감액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비용을 보전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일부 공공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별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낙찰률보다 높은 비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기도 함.

102) 전영준(2016),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 단축 법안의 문제점, 건설동향브리핑 590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요 인용.

- 는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관련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일은 우리나라에 비해 유사하거나 오히려 길게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대금 지급 규정 또한 우리나라가 주요 건설 선진국에 비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49개 주 「PPA법」을 살펴보면, 원사업자의 대금 수령 후 ‘평균 16일’ 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마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호 동의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근무일 기준으로 정한 경우도 많아 우리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과 유사함.
 - 독일의 경우에는 공공공사 수행 시 수급사업자 목적물 인도 이후 ‘영업일 기준 18~2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및 일본의 경우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주요 건설 선진국의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15~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직접시공 비율이 높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을 독립된 계약으로 판단하고 있는 독일 외 타 국가의 경우, 원사업자가 관련 대금을 수령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부분 지급을 강요하지 않아 우리나라 「하도급법」이 수급사업자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때 현행 우리나라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일각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해외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선진국의 경우 단일 법률 또는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이 각 법률간 동일한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우리나라 또한 제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별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대금지급 기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표 VIII-3> 참조).

<표 VIII-3> 각 국가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현황

국가	대상 공사	지급 기한	관련 법령
한국	공공 및 민간 공사	• 원사업자 대금 수령 후 15일	건설산업기본법
		• 원사업자 대금 수령 후 15일 • 원사업자 목적물 수령 후 60일	하도급법
미국	연방 공공공사	• 원사업자 대금 수령 후 7일	PPA법
	주 공공 및 민간 공사	• 49개 주별 평균 원사업자 대금 수령 후 16일	주별 PPA법
EU	공공 및 민간 공사	• 별도 계약서를 통해 규정하지 않은 경우 30일 (최대 60일, 원사업자 확인 30일+대금지급 30일)	대금지급 지연 규정 (Directive 2011/7/EU)
독일	공공공사 <small>주1)</small>	• 원사업자 목적물 수령 시 즉시 지급 • 단, 분할 지급 계약인 경우 수급사업자 청구일 기준 18~24일(영업일 기준) <small>주2)</small>	건설공사 시공을 위한 일반계약조건 (VOB/B)
영국	공공공사	• 수급사업자 청구일 기준 30일	공공조달 관련 통합 지침
	민간공사 <small>주3)</small>	• 기성금 : 사전 협의된 날로부터 7일 또는 청구일 중 늦게 도래한 날까지 • 준공금 : 공사 완료 후 30일 또는 청구일 중 늦게 도래한 날까지	건설계약규정지침
프랑스	공공 및 민간 공사	• 수급사업자 청구일 기준 30일	하도급에 관한 법률 (LST)
일본	공공 및 민간 공사	• 원사업자 대금 수령 후 30일 (원사업자가 특정건설업자인 경우 50일)	건설업법

주 : 1) 독일의 경우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EU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법령을 통해 민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을 준용함.

2) 소규모 단순 설치 공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건설공사가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분할 지급)하도록 사전 도급(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특성으로 인해 목적물 수령시 즉시 지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3) 「신건설업법」의 경우 민간공사인 경우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롭게 대금지급 기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건설업법」 하위 규정인 「건설계약규정지침」에서는 별도 대금지급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금지급 기일을 준수하도록 규정함.

(5)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 우리나라의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규정 또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서 서로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어 해당 규정의 일원화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시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하도급법」에서는 현금 외 어음 지급(단,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비율만큼 하도급대금 현금 비율 지급)을 허용하고 있어 실무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해외 조사국 모두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규정이 없어 과도한 수급사업자 보호 규제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법」을 통하여 현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으며, 의무 규정은 아님(단, 노무비의 경우 현금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어음의 경우 1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6) 징벌적 손해배상

- 조사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영미법 체계인 미국, 영국에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나 미국 및 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수급사업자(피해자)가 원사업자(가해자)의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법 적용의 형평성을 훼손하여 과도하게 수급사업자만을 보호하고 있는 규제로 판단 가능함.

-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건설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소송의 증가는 건설사들의 업무 비용과 건설공사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기에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해외 조사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사료됨.

(7) 표준 하도급계약서 활용

- ‘표준 하도급계약서 활용’에 대한 선진국 사례 조사 결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만 정부 주도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그 활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그 외 해외 국가의 경우 각 건설공사 참여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에 의해 공표된 표준계약 약관 (standard form contract documents)을 개별 사업에 특성에 맞게 원용하여 활용하거나, 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표준계약 약관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이는 산업 및 사업의 특성과 현업의 니즈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해당 단체에서 지속적 보완을 통해 개발한 표준계약 약관이 가장 합리적이고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정부기관 주도의 단일화된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 및 활용 권고에서 탈피하여 국내외 관련 협·단체에서 제정한 표준계약 약관 및 이를 원용한 기업 자체의 표준 하도급계약 양식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대표적 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을은 약자’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원사업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균형 잃은 일방통행식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또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보완을 통한 균형 발전의 기본원칙 내에서도 사업자간 갈등은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 및 발주자를 대표하는 국내외 협·단체에서

제정한 표준계약 약관(단, 공정위 및 관련 단체 통합 협의회 등을 통한 약관 검토 절차 포함)을 활용하여 사인간 거래의 자율성도 보장하고, 수시 제·개정을 통한 산업 적응력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종합 시사점

-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선진국의 하도급 규제 사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선진국의 경우 산업 구조 자체가 시장 스스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경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그 바탕에서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따라서 건설 하도급 거래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계약을 전제로 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한적 규제 위주로 관련 법령을 운용하고 있음.
 - 또한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체결된 계약 내용의 이행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원가 인상에 따른 단가의 추가 조정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하도급법」 등과는 달리 사정변경의 원칙¹⁰³⁾은 입법적으로 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고 판단됨.
- 규제의 적용 범위 또한 우리나라는 「하도급법」에 의해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원사업자인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일본 「하청법」¹⁰⁴⁾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쟁 제한적 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고 그 특성¹⁰⁵⁾에 맞는 규제 체

103) 법률 행위의 성립 당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현저히 변화된 경우에 당초에 정한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강제하는 것은 신의 성실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이 경우 법률 행위의 효과가 새로운 사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것을 청구하거나 또는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 위키피디아 참조.

104) 일본 「하청법」에서는 건설 하도급을 해당 법률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 않고 「건설업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으나, 하도급 관계에 대한 접근 관점에 대한 소개를 위해 언급함.

계를 마련하고 있는 등 하도급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함.

- 둘째, 선진국의 건설 하도급 규제 법률의 경우 우리나라의 「하도급법」과는 달리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산업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설 관련 법령이나 공공 건설조달 관련 법률을 통해서만 규제하고 있음.
 - 이는 매년 다른 사업 참여자들과 한시적 장소에서 일회성 생산이 이루어지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하도급과 동일한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설 관련 법률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법률을 통해 하도급 거래를 중복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부 공공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부가적인 규제 외에는 건설 관련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함.
-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 하도급 규제가 사후 분쟁 해결 및 강력한 처벌을 통한 공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비해 선진국의 경우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의 분쟁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 중심의 규제와 지원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프랑스 국립 하도급센터(CENAST)의 「하도급거래 가이드(Guide contractuel des relations de sous-traitance)」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역할, 원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 하도급 업무 수행 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일본 「건설업법 준수 가이드라인」 및 기타 국토교통성 발간 하도급 불공정 행위 예방 가이드 등의 경우 또한 <그림 VIII-1>과 같이 건설 하도급에 적합한 관련 법령 규정 해설과 불공정 행위 사례 등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삽화와 다이어그램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음.

105) 원사업자보다(중소기업) 규모가 큰 수급사업자(대기업)인 경우에도 하도급 규제 적용 대상임. 즉, 일본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

<그림 VIII-1> 일본의 건설 하도급 불공정 행위 예방 가이드 사례

1. 見積条件の提示（建設業法第20条第3項）

【建設業法上違反となるおそれがある行為事例】

① 元請負人が不明確な工事内容の提示等、曖昧な見積条件により下請負人に見積りを行わせた場合

② 元請負人が下請負人から工事内容等の見積条件に関する質問を受けた際、元請負人が、未回答あるいは曖昧な回答をした場合

【建設業法上違反とならない行為事例】

③ 元請負人が予定価格が700万円の下請契約を締結する際、見積期間を3日として下請負人に見積りを行わせた場合

上記①及び②のケースは、いずれも建設業法第20条第3項に違反するおそれがあり、③のケースは同項に違反する。

建設業法第20条第3項では、元請負人は、下請契約を締結する以前に、下記（1）に示す具体的な内容を下請負人に提示し、その後、下請負人が当該下請工事の見積りを行なうために必要となる期間を設け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ている。これは、下請契約が適正に締結されるためには、元請負人が下請負人に対し、あらかじめ、契約の内容となるべき重要な事項を提示し、適正な見積期間を設け、見積り済みの状態が生じないという検討する期間を確保し請負代金の額の計算その他の請負契約の締結に関する判断を行わせることが必要であることを踏まえたものである。

(1) **見積条件の提示に当たっては下請契約の具体的な内容を提示することが必要**

建設業法第20条第3項により、元請負人が下請負人に対して具体的な内容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は、同法第19条により請負契約書に記載す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る事項（工事内容、工事着手及び工事完成の時期、取崩し又は出足部分に対する支払の時期及び方法等（4ページ「2-1 当初契約」参照））のうち、請負代金の額を算出すべての事項となる。

見積りを厳正に行うという建設業法第20条第3項の趣旨に照らすと、例えば、上記のうちの「工事内容」に關し、元請負人が最低限明示すべき事項としては、

- ① 工事名称
- ② 施工名称
- ③ 設計図書（数量等を含む）
- ④ 下請工事の責任施工範囲

- 2 -

<국토교통성 발간
건설업법 준수 가이드 라인>

4 下請代金の支払について

(1) 引渡しの出が出てから支払いを行うまでの期間

下請代金の支払期日が規定されていないと、下請負人は元請負人から一方勝手に支払期日を課せられたりする等、下請負人が不当な不利益をこうむる恐れがあります。

元請負人は、注文書から下請代金の支払を受けた場合にのみ、一定期間内に下請代金を支払うことを義務づけられています(建設業法第4条の3)。下請負人の保護の観点から見て、特定建設業者は、注文書から支払を受けた日から起る、工事完了の直後後、下請負人(特定建設業者又は資本金額が1,000万円以上の法人を除く)から工事目的物の引渡しを受けたときは、その日から60日以内に下請代金を支払うなければなりません。(建設業法第4条の第1項) これに違反した特定建設業者に対しては、高率の遅延利息の支払義務を課せられることとなります。

検査・引渡：下請代金の支払日＝特定建設業者

注：支払期日は工事完了の日ではなく、検査・申し出の日が支払期日となる。(法第24条の4第1項)

支払期日

下請負人が引渡し申し出をするときは、**書面**に工事目的物の引渡しを受ける。(法第24条の4第2項)

検査・引渡

検査・引渡は完成通知を受けてからの引渡しで、できる限り早い期間に行う。(法第24条の4第3項)

検査・引渡に基づく検査

検査・引渡

下請代金の支払は、下請負人が引渡し申し出をした日から**10日以内**で、書き添付引渡しの書類を添付する。(法第24条の4第1項) 注：(引渡しの書類とは、工事目的物の引渡しを受ける書面、支払期日、支払金額、支払方法、支払口座の記載を含む)

支払期日

**<국토교통성 간사이지방정비국 발간
적정한 하도급계약 가이드>**

- 하지만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은 업종 구분이 없는 전체 업종을 포괄하는 선언적 지침으로 해당 지침을 숙지¹⁰⁶⁾하더라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각 업종별 특성에 따른 관계 법령을 다시금 살펴보아야만 하기에 건설업에 적합한 불공정 행위 사전 예방 목적의 구체적 사례 기반의 지침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06) 김관보 외(2015), 전제서.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국무총리실·국토해양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 하도급규제 합리화 방안」, 2011.5.
-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외국법률 번역사업 결과보고서」, 국회도서관, 2006~2014.
- 강기홍,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II) - EU·독일」, 제정법제 연구 11-15-3-2, 한국법제연구원, 2011.10.
- 강기홍, 「EU와 독일법상 공공조달 제도」, 공법학연구, 13(1), 2012.
- 강유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 김관보 외, 「선진국의 위수탁 계약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5.
- 김명수 외, 「건설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7.2.
- 김성일 외,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기본 15-10), 국토연구원, 2015.12.
- 김재영, 「건설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 건설 하도급 정책 개선방안」, 대한민국 국회, 2010.12.
- 박수곤, 「프랑스에서의 하도급법에 대한 개관 - 건축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담보수단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25), 2004.
- 박지원,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입법례 - 징벌적 손해배상 v. 배액배상 -」, 입법현안 법률정보, 12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13.6.
-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1.1.
- 이의섭, 「건설 하도급 거래 합리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선진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8.
- 이의섭,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2.3.
- 이의섭, 「영미법 사례로 본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고찰」, 건설이

- 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
- 이의섭,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고찰」, 연구보고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
- 이종광 외, 「건설산업 상생협력 해외사례 분석」, 건설정책리뷰(2012-07),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2.09.
- 이청훈, 「[일본정책연구] 2014·2015년도 추진 중소기업 시책」, 백서공방, 2015.10.
- 이효경,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Ⅲ) -일본」, 제정법제 연구 11-15-3-3, 한국법제연구원, 2011.10.
- 외교부, 「유럽연합 개황」, 2010.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을 위한 미조달시장 진출 안내서] 미국연방 조달규정해설」, 2011.2.
- 전영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법안의 문제점」, 건설동향브리핑 590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12.
- 정재각, 「독일연방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1-44, 한국행정연구원, 2011.12.
- 채형복, 「유럽헌법조약」, 높이깊이, 2006.3.
- 채형복, 「리스본 조약」, 지식경제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2010.8.
- 최민수 외,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사기준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기획재정부, 2011.9.
- 최민수, 최은정, 「일본 건설업 허가 및 시공체제 제도 현황과 시사점」, 연구자료 2015-0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5.11.
- 최인호,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Ⅰ) -미국」, 제정법제 연구 11-15-3-1, 한국법제연구원, 2011.10.
- 최인호, 「〈행정법〉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정부조달계약의 공공성과 하도급질서의 공정화를 위한 법적 규율」, 법학논총, 31(3), 2011.12.

외국 문헌

- ConsensusDocs, 「10 Reasons Your Projects Need ConsensusDocs」, 2016.
- Edward H. Tricker, Kory D. George, and Erin L. Ebeler, 「Survey of Prompt Pay

Statutes」, Woods & Aitken LLP., 2010.

Innis, D. F., A. P. Silberman, 「Provision and Issues Unique to Government Contracts, Federal government construction contracts」, American Bar Association, 2010.

Kathleen O. B., Bennett J. L., 「Recent Developments in Standard Form Construction Agreements」, Estimating Today, American Society of Professional Estimators, 2007.12.

Law Firm of Kegler Brown Hill + Ritter, 「Prompt Payment in the 50 States」, Foundation of the American Subcontractors Association, Inc., 2014.

Steven Evans, 「Payment under the new ‘Construction’ Act - a Practical Guide」, Steven C Evans Ltd., 2016.

Neal, 「UK Construction Act Overview : Take Control of Subcontractor Payments」, OpenECX, 2016.2.

Victoria L. Becker, 「Fifty State Survey of Prompt Payment Acts for Construction Contracts」, Law Firm of ECKERT SEAMANS, 2015.

Yosof Ewing, 「The New Construction Act 2009 - The New Act and What You Need to Know」, white paper, CPUK, 2009.

国土交通省 近畿地方整備局, 「適正な下請契約に向けて」, 2004.

사이트

독일 연방 법률 관보(<https://dejure.org>)

독일 VOB 소개 사이트(Beuth 출판사)(<http://www.vob-online.de>)

미국 건설협회(<http://www.agc.org>)

미국 건축사협회(<http://www.aia.org>)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시공계약자협의회(<http://www.nclbgc.org>)

미국 뉴햄프셔주 정부(<https://www.nh.gov>)

미국 루이지애나주 시공계약자협의회(<http://www.lslbc.louisiana.gov>)

미국 아칸소주 시공계약자협의회(<http://www.aclb.arkansas.gov>)

미국 연방정부전자조달공시시스템(<http://www.fbo.gov>)
미국 오클라호마주 주 의회(<http://www.oklegislature.gov>)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의회(<http://sdlegislature.gov>)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회(<http://scstatehouse.gov>)
미국 중소기업청(<https://www.sba.gov>)
미국 총무청 구매조달 정보 사이트(<https://www.acquisition.gov>)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공계약자협의회(<http://www.cslb.ca.gov>)
미국 하도급자협회(<http://www.asaonline.com>)
미국 하원 산하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http://uscode.house.gov>)
미국 주별 법령정보제공 사이트(<http://codes.findlaw.com>)
법제처 산하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
유럽연합 법률정보시스템(<http://eur-lex.europa.eu>)
영국 빌딩매거진(<http://www.building.co.uk>)
영국 법률정보시스템(<http://www.legislation.gov.uk>)
일본 국토교통성(<http://www.mlit.go.jp>)
일본 전자정부법률시스템(<http://law.e-gov.go.jp>)
프랑스 정부 포털(<http://www.gouvernement.fr>)
프랑스 법률정보시스템(<https://www.legifrance.gouv.fr>)

부록 1

미국의 건설사업참여자 대금지급 규정(주별 「PPA법」)

구분		근거법령	발주자 -원사업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 -재수급사업자	지연이자율 (하도급)
연방정부		31 U.S.C §3901, 48 CFR §52.232~27	Invoice 후 기상: 14일, 준공: 30일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계약분쟁법 : 월복리
Alabama	공공	Ala. Code §41-16-3	30일*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월 1%
	민간	Ala. Code §8-29-1~§8-29-8	30일*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법정이율
Alaska	공공	Alaska Sta. §36.90.200~§36.90.290, §45.45.010	21일 또는 30일	대금수령 후 8일	대금수령 후 8일	법정이율
Arizona	공공	Arizona Rev. Sta. §34-221, §41-2576, 41-2577, 28-6924, §15-213	기상 : 14~21일, 준공: 60일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월 1%
	민간	Arizona Rev. Sta. §32-1129~§32-1129.06	7~21일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월 1.5%
Arkansas	공공	Ark. Code § 19-4-1411	근무일 기준 15일 (설계전문가 검토 5일, Arkansas 건축당국 5일, 회계부서 5일)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연 8%
California	공공	Cal. Bus & Prof Code §7108.5; Civil Code §8802; Cal. Pub Contract Code §7107, 10261.5, 10262.5, 10853	30일 (주립대학의 경우 39일)	대금수령 후 21일	대금수령 후 7일	원도급: 연 10%, 하도급: 월 2%
	민간	Cal. Bus & Prof Code §7108.5; Cal. Civil Code §8800, §8810~§8822	30일 (유보금 지불 45일)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월 2%

107) Maryland 공공공사에서 하도급 체불이자 규정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공공 발주처 감독관 (Procurement officer)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불 2일 이내에 관련 행동을 취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MD STATE FIN & PROC §15-226(e)).

Colorado	공공	Colo. Rev. Stat. §24-91-101 ~ §24-91.103	매월 말일 또는 가능한 한 빨리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연 15% 또는 계약서에 명시한 이율 중 높은 이율
Connecticut	공공	Conn. Gen. Stat. §4a-71 ~ §4a-75, §49-41a, §49-41c.	45일*	대금수령 후 30일	대금수령 후 30일	원사업자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채 단기 투자펀드 월간유효 이자율 준용
	민간	Conn. Gen. Stat. §42-158i ~ §42-158j	30일*	대금수령 후 30일	대금수령 후 30일	월1%
Delaware	공공	Del. Code, Title 29, §6516(f)	기성 : 월 기성인 경우 10~21일, 그 외 최대 90일 준공: 60일	대금수령 후 21일*	대금수령 후 21일*	연방준비 은행 이자율 + 2% 이내
	민간	Del. Code, Title 6, §2301, §3501~§3507, §3509	30일	대금수령 후 15일*	대금수령 후 15일*	-
Washington D.C (District of Columbia)	공공	D.C. Code §2-221.01 ~ §2-221.06	30일* (법정공휴일 제외)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워싱턴D.C 시장이 별도 규정
	민간	D.C. Code §27-131 ~§27-136	15일*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월 1.5%
Florida	공공	Fla. Stat. §255.0705, §215.422, (지자체 §218.70)	30일 (지자체 근무일 기준: 25일) (FDOT의 경우 준공: 75일)	대금수령 후 10일	대금수령 후 7일	월 1% (FDOT의 경우 75일 이상 지연 시 또는 클레임 이후 30일 이상인 경우 별도 지정 이율 배상)
	민간	Fla. Stat. §713.346, §715.12	준공: 14일	30일	30일	법정이율

Georgia	공공	Ga. Code §13-11-1~ §13-11-11	15일	대금수령 후 10일	대금수령 후 10일	월 1%
	민간					
Hawaii	공공	HRS §103-10~§103-10.5, HB 3036	30일	대금수령 후 10일	청구서 수령 후 60일 (단, 에스크로 및 신탁기금에 따라 상이)	원도급: 기준금리 + 2% 하도급: 월 1.5% (단, 준공금 지연 시)
	민간	HRS §441-1~§441-25	-	청구서 수령 후 60일 (단, 에스크로 및 신탁기금에 따라 상이)	청구서 수령 후 60일 (단, 에스크로 및 신탁기금에 따라 상이)	월 1% (60일 이상 체불 시)
Idaho	공공	Idaho Code §67-2302	60일*	-	-	원도급: 연방이율 중간값 + 2%
Illinois	공공	Title 30 ILCS 540/0.01 ~ 540/7	60일 (30일 승인, 30일 지급)	대금수령 후 15일	대금수령 후 15일	원도급 : 월 1% (일 0.33%) 하도급: 월 2%
	민간	Title 815 ILCS 603/1 ~ 603/99	40일 (25일 승인, 15일 지급)	대금수령 후 15일	대금수령 후 15일	연 10%
Indiana	공공	Burns Ind. Code Ann. §5-17-5-1~§5-17-5-5, §5-16-5.5-1~ §5-16-5.5-8	주정부: 35일(기상), 61일(준공) 지자체:45일 (고속도로 PJT인 경우 자체규정 적용)	대금수령 후 10일	-	월 1%
Iowa	공공	Iowa Code §573.12, §573.14	기상: 14일 (최대 30일), 준공: 40일 (최대 50일 이내)	대금수령 후 7일	-	발주기관별 상이

Kansas	공공	Kan. Stat §75-6401~§75-6407	30일 (고속도로 PJT 제외)	-	-	연 18%
	민간	Kan. Stat. 16-1801~16-1807	30일	대금수령 후 근무일 기준 7일	대금수령 후 근무일 기준 7일	연 18%
Kentucky	공공	KRS 371.400 ~ 371.425, PPA §45.451 ~ §45.458	기상: 30일 (근로기준일 기준) (학교의 경우 45일), 준공: 30일	대금수령 후 근무일 기준 15일	대금수령 후 근무일 기준 15일	연 12%
	민간					
Louisiana	공공	La. Rev. Stat. §9:2784; 38:2191	기상: 계약서에 의해 지급, 준공: 45일 (시공사 유치권 해소 증명원 발급 이후)	대금수령 후 14일	대금수령 후 14일	고속도로PJT:법정이율, 그 외 PJT: 지연이율 없음
	민간	La. Rev. Stat. §9:2784	-	대금수령 후 14일	대금수령 후 14일	최고 15%까지 일별 1.5% 가산
Maine	공공	10 M.R.S. §1113, §1114, §1118, 5 M.R.S §1554	기상: 20일* 준공 : 30일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법정이율 + 월 1%
	민간					
Maryland	공공	Md. State Fin. & Proc. §15-101~§15-108, §15-226	30일	대금수령 후 10일	대금수령 후 10일	원도급: 연 9% 하도급: 별도 지연이자 규정 없음 ¹⁰⁷⁾
	민간	Md. Code, Real Property, §9-301~§9-304	준공: 30일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법정이율

Massachusetts	공공	M.G.L. c. 30 §39F, 39G, 39K, PPA Chapter 29 §29C	기성: 15~30일, 준공: 65일 (원도급 기성유보금 5% 이하)	기성: 즉시 준공: 65일 이하	-	연방준비은행 재할인율 + 3%
	민간	M.G.L. c. 149, §29E (주거 프로젝트 제외 300만 달러 이상 사업 적용)	45일 (공사 중지 시 30일 이내 지급)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규정은 없으나, 일반이율 +12%
Michigan	공공	M.C.L.A §125.1561~§125.1565 (고속도로, 학교, 주거사업 제외)	30일	-	-	합리적 지연이자율 산정 원칙
Minnesota	공공	Minn. Stat. §15.71~74, PPA §16A.124~1245. §137.36	월별 기성인 경우 30일* 그 외 지자체의 경우 35일(정기적 월별 미팅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또는 45일(정기적 월별 미팅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금수령 후 10일	-	월 1.5%
	민간	Minn. Stat. §337.10	월별 기성*	대금수령 후 10일	대금수령 후 10일	월 1.5%
Mississippi	공공	Miss. Code. §31-5-25, §31-5-27	기성: 계약서에 의해 지급, 준공: 45일	대금수령 후 15일	-	원도급: 월 1%, 하도급: 최고 15%까지 일별 0.5% 가산
	민간	Miss. Code. §87-7-3, §87-7-5	기성: 계약서에 의해 지급, 준공: 30일	대금수령 후 15일	-	

Missouri	공공	Rev. Mo. Stat. §34-057	기성: 30일 준공: 30일	대금수령 후 15일	대금수령 후 15일	월 1.5%
	민간	Rev. Mo. Stat §431.180	계약자간 합의	계약자간 합의	계약자간 합의	법원판례: 최고 월 1.5%
Montana	공공 (주정 부)	Mont. Code §17-8-241~§17-8-244, §28-2-2103(2,3)	30일*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법정기준 금리+ 일 0.05% 또는 연 10%
Montana	민간 및 지방 정부	Mont. Code §28-2-2101~§28-2-211 7, MCA	28일 (승인 21일, 지급 7일) (월기성 기준)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월 1.5%
Nebraska	공공	Neb. Stat. §81-2401~§81-2408	45일* (고속도로PJT 인 경우 준공 : 60일)	-	-	원도급: 법정기준 금리
	민간	Neb. Stat. §45-1201~§45-1211	45일	10일	10일	월 1%
Nevada	공공	Nev. Rev. Stat. §338.400~§338.645	-	대금수령 후 10일	대금수령 후 10일	법정이율
	민간	Nev. Rev. Stat. §624.606~§624.630	기성: 21일*, 준공: 30일	대금수령 후 10일* 또는 대금지급 요청 후 30일	대금수령 후 10일* 또는 대금지급 요청 후 30일	법정기준 금리+ 4%
New Jersey	공공	N.J. Stat. §2A:30A-1, §30A-2, §40A:11-16.2(지자체)	30일 (지자체의 경우 월기성, 단, 공공기관의 경우 다음번 공식 미팅까지 연기 가능)	대금수령 후 10일*	대금수령 후 10일*	기준금리 + 1% (고속도로 프로젝트 제외)
	민간					
New Mexico	공공	N.M. Stat §57-28-1~§57-28-11	기성: 21일, 준공: 10일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월 1.5%
	민간					

New York	공공	NY State Finance Law §139-f, §179-f, NY General Municipal Law §106-b	30일 (고속도로PJT 75일)	청구서 수령 후 7일	청구서 수령 후 7일	세무 국장이 결정한 초과지급 이율 또는 세법 제1096조에 의해 결정
	민간	N.Y. General Business Law §756	42일* (승인 12일, 지급 30일) 단, 발주자가 대출실행 실패 시 기간연장 가능	청구서 수령 후 7일	청구서 수령 후 7일	월 1% 또는 계약에 의해 정한 지연이율 중 높은 이율
North Carolina	공공	N.C. Gen Stat. §143-134~§143-134.1, §143.135 (고속도로PJT 제외)	기성: 계약에 의거 지급, 준공 : 45일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월 1%
	민간	N.C. Gen. Stat. §22C-1~§22C-6	-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월 1%
North Dakota	공공	N.D. Cent. Code §13-01.1-01~§13-01.1-06	45일*	대금수령 후 45일	대금수령 후 45일	월 1.75%*
Ohio	공공	Ohio Rev. Code §126.30	30일*	대금수령 후 10일	대금수령 후 10일	월 1.75%
	민간	Ohio Rev. Code §4113.61	-	대금수령 후 10일	대금수령 후 10일	연 18%
Oklahoma	공공	Okla. Stat. Title 61, §221~§227 (고속도로PJT 제외)	-	대금수령 후 10일	대금수령 후 7일	월 1.5%
	민간	15 OKl. Stat. §820	28일	대금수령 후 10일*	대금수령 후 10일*	-

Oregon	공공	Or. Rev. Stat. §279C.320, 505, 570, 580	기성/준공: 30일	대금수령 후 10일	대금수령 후 10일	원도급(준공) : 월 1.5%, 원도급(기성) : 법정이율 30% 가산, 하도급: 법정요율
	민간	Or. Rev. Stat. §701.620	기성: 14일 준공: 7일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월 1.5%
Pennsylvania	공공	62 Pa. Con Stat. §3931~§3935	기성: 45일*, 준공: 준공 검사 후 30일, 준공 검사 요청 이후 45일	대금수령 후 14일	대금수령 후 14일	법정이율 + 부당체불시 월 1% 가산
	민간	73 P.S. §501~§516 (발주자 시행 사업 및 6개 이하 소규모 주거 사업 제외)	기성: 20일* 준공: 30일	대금수령 후 14일	대금수령 후 14일	월 1%* + 부당체불시 월 1% 가산
Rhode Island	공공	R.I. Gen. Laws §42-11.1-1~ §42-11.1-16	30일*	대금수령 후 10일	-	원도급: 기준금리, 하도급: 규정 없음
South Carolina	공공	S.C. Code §29-6-10	21일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월 1%
	민간					
South Dakota	공공	S.D. Codified Laws §5-26-1~§5-26-8	45일	대금수령 후 30일	-	월 1.5%
Tennessee	공공	Tenn. Code §12-4-701~§12-4-707	45일	대금 수령 후 30일	청구서 수령 후 30일	월 1.5%
	민간	Tenn. Code §66-34-101 ~§66-34-703	기성: 30일, 준공: 계약완료 후 즉시 (모든 유보금은 90일 내 지급)	청구서 수령 후 30일 (모든 유보금은 90일 내 지급)	청구서 수령 후 30일 (모든 유보금은 90일 내 지급)	법정이율*
Texas	공공	Tex. Govt. Code §2251.001~§2251.043	31일	대금수령 후 10일	대금수령 후 10일	기준금리 + 1%
	민간	Tex. Prop. Code §28.001~§28.010	35일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월 1.5%

Utah	공공	Utah Code §13-8-5, §15-6-1~§15-6-6	기성: 60일*, 준공유보금: 45일	대금수령 후 30일 (유보금 10일)	대금수령 후 30일 (유보금 10일)	원도급: 미국국세청 환급세율 + 2% 하도급: 15.5%
	민간	Utah Code §13-8-5, §58-55-603	기성: 규정 없음 준공유보금: 45일	대금수령 후 30일 (유보금 10일)	대금수령 후 30일 (유보금 10일)	하도급: 기준금리 + 1%
Vermont	공공	Vt. Stat. Title 9, §4001~§4009	기성: 20일 준공: 30일*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법정이율 (부당채불 시 월 1% 가산)
	민간					
Virginia	공공	Va. Code §2.2-4347~§2.2-4356	주정부: 30일*, 지방정부: 45일*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원도급: 기준금리*, 하도급 및 지역업체: 월 1%*
Washington	공공	Wash. Rev. Code. §39.76.010~§39.76.40, §39.04.250	30일*	대금수령 후 10일	대금수령 후 10일	원도급: 1%, 하도급: 최고 법정이율
West Virginia	공공	W. Va. Code §5A-3-54(주정부), §7-5-7(카운티), 9-13-22d(지자체)	60일	-	-	원도급: 법정이율 (60일 이상 지연 시)
Wisconsin	공공	Wis. Stat. §16.528(주정부), §16.53(2)(청구서 거절 시), §66.0135(지자체)	30일	대금수령 후 7일	대금수령 후 7일	-
Wyoming	공공	Wyo. Stat. §16-6-601~§16-6-602	45일	-	-	-

* : 상호 동의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주 : Alaska(민간), Arkansas(민간), Colorado(민간), Florida(민간), Idaho(민간), Idaho(민간), Indiana(민간), Iowa(민간), Michigan(민간), Nebraska(민간), New Hampshire(공공/민간), New Dakota(민간), Oklahoma(민간), Rhode Island(민간), South Dakota(민간), South Carolina(공공), Virginia(민간), Washington(민간), West Virginia(민간), Wisconsin(민간), Wyoming(민간)은 관련 규정 없음.

자료 : Law Firm of Kegler Brown Hill + Ritter(2014), Prompt Payment in the 50 States, The American Subcontractors Association 및 Law Firm of ECKERT SEAMANS(2015), Fifty State Survey of Prompt Payment Acts for Construction Contracts 참조 및 관련 법령 재확인.

Abstract

The Status and Implications of Foreign Construction Subcontract Regulations

This research conducted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into the status of the construction subcontract regulations of major countries(USA, EU, Germany, England, France and Japan), aiming at the reasonable improvement of the construction subcontract regulations of Korea by deducing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such improvement and providing basic research data for follow-up research.

First of all, the individual countries' laws on subcontract regulation were reviewed and outlined. Then their characteristic regulations on construction subcontract were analytically examined. Finally, based on the comparison of construction subcontract regulations between those countries and Korea,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for follow-up research were provided in the following aspects: ① regulations on banning of subcontract all of the construction work and on obligatory direct construction, ② Regulations on banning of re-subcontract, and of subcontract between the companies of the same business area, ③ suitability assessment of subcontract, ④ observance of subcontract payment deadline, ⑤ obligatory subcontract payment in cash, ⑥ punitive damage, ⑦ standard contract document between prime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The implications deduced by synthetically comparing the construction subcontract regulations of the foreign countries and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 foreign countries have a different viewpoint on subcontract relation, as is evident from their laws on construction subcontract transaction that consist mostly

of restrictive regula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between prime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Second, unlike Korea, the foreign countries regulate construction subcontract without involving special legislation, but only through the laws related to construction industry or public procurement. Third, in contrast to the construction subcontract regulations of Korea, which focus on post-dispute resolution and heavy punishment in order to achieve fair transaction, those of the foreign countries emphasize preventive measure, along with supporting policy, against dispute and unfair practice in subcontract transaction relation.

○ 저자 소개

전영준(yjjun@cerik.re.kr)

한양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수료(건설경영 및 정보)

한미글로벌(주) 기획인사팀 전사 기획담당 과장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